

사드 배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결정 철회하라

▶ 관련 기사 2, 3면



다음 호는 8월 17일에 발행됩니다.

방한한 주디스 오어
여성 해방과 성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8~9, 15면

이호중
세월호특조위원이
말하는 특별법
개정 이유

4면

조직
노동운동은
고립됐는가

6~7면

조선업 구조조정
노동자는 책임 없다

16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
로봇과
인공지능 논쟁

12~13면

유럽연합과
이민자

11면

여름휴가용
풍성한 읽을 거리

14면

사드는 동아시아 불안정과 군비 경쟁을 격화시킬 뿐이다

김영익

지난 7월 8일 한미 당국의 '사드'(THAAD : 종말고고도지역방어 체계 ;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발사 기지) 배치 결정' 발표는 완전히 기습적이었다. 사전에 아무런 정보 공개나 예고도 없었다.

7월 5일 국회 대정부질의 때 국방 장관 한민구는 사드 배치 시기와 지역에 관해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그런데 7월 8일 오전 느닷없이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며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배치 지역(경북 성주)도 실무단 차원에서 이미 결정된 상태였다.

한미 당국은 그동안 사드 배치를 미리 합의해 놓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셈이다. 또한 미국이 발표 시기를 앞당기자고 박근혜 정부에게 재촉했던 듯하다.

사드 배치 합의처럼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은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 사안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박근혜는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올려댔다. '닥치고 복종'하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기호 변호사가 국방부에 사드 배치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물었을 때, 국방부는 "우리 나라에 배치를 상정해 평가한 주민 건강 영향 평가 보고서는 없다"고 답변했다.

사드 레이더(AN/TPY-2 엑스 밴드 레이더)는 강력한 전자파를 내뿜어 성주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국방부는 미군 자료를 인용해,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상 안전거리는 1백미터"에 불과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미 육군 교본에도 레이더 전방 3.6킬로미터까지 "통제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은 절대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군인이 아니라, 레이더 인근에 상시 거주하는 민간인들이 레이더 전자파에 어떤 피해를 받을지에 관한 믿을 만한 자료나 정보도 없다. 국방부는 배치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안중에 없고, 미국의 군사적 필요를 우선시해 배치 지역을 결정하고 이를 관철시킬 작정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며 사드 배치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이 결정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간 경쟁의 수준과 규모를 더한층 높일 것이고 불안정을 심화시킬 것이다.



동아시아 불안정 심화시킬 최악의 '인화물질' 사드

사드는 왜 위험한가

그동안 미국이 수년 동안 집요하게 사드 한국 배치를 추진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경쟁 제국주의 국가들을 견제하는 데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사드는 고도 40~1백50 킬로미터에서 단·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이하 MD)의 일부다.

사드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2백 킬로미터 남짓이지만, 사드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2천 킬로미터에 이른다.(최대 5천 킬로미터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따라서 "사드 레이더의 한국 배치는 동북아 MD 구축을 위한 핵심 고리"가 될 것이다(평화통일연구소 고영대 연구위원). 그래서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 중심의 동북아 MD 체계의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준다."

사드 레이더가 한국에 배치되면, 미국과 일본이 중국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고 추적하는 게 훨씬 쉬워진다. 그래서 중국의 미사일을 무력화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중국은 자신의 주요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동·남중국해 일대를 미국이 주름 잡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유사시 미국 군사력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군사력, 특히 미사일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 왔다. 미사일이 미군기지나 미국 항공모함을 타격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바로 역내 미군기지(평택, 광, 오키나와 등)

나 미국 항공모함을 향하는 중국 미사일을 재빨리 탐지할 수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 곳곳에 구축되는 MD가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그만큼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경쟁 제국주의 국가의 군사력에 맞서 자국의 우위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한국이 미국 MD에 편입된다는 것도 의미한다. 2012년 한국 국방부는 스스로 사드 레이더 설치를 미국 MD의 편입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게다가 올해 안에 한미 양국은 양국의 MD 체계를 연동시킬 예정이다.

한·미·일 동맹

한국이 미국 MD에 편입되면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과 한·미·일 동맹을 더한층 강화할 수 있다. 2013년 6월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내놓은 "아시아·태평양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했다. "통합된 미사일방어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제도화된 집단안보의 선구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한·미·일 3국의 군사 협력은 MD를 중심으로 더 긴밀해지고 있다. 지난 6월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 이 하와이 근해에서 해상 MD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 정보 공유 능력을 검증하고 SM-3 미사일(해상 기반 요격 미사일)의 요격 훈련도 진행한 것이다.

2014년 12월 한·미·일 3국이 북한 핵·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서로 주



기습적으로 이뤄진 7월 8일 사드 배치 결정 발표.

고반아야 한다면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도 체결했다.

사드 배치는 한·미·일 동맹의 수준을 크게 변모시킬 것이다. 올해 초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하자, 일본 아베 정부는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다. 우선, 일본도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6월 초 상그릴라 대화에서 미국과 일본이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 것도 바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롯한 한일 군사 협력 강화였다.

이처럼 사드 배치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다자동맹체제 구축을 본 궤도에 올려놓는 계기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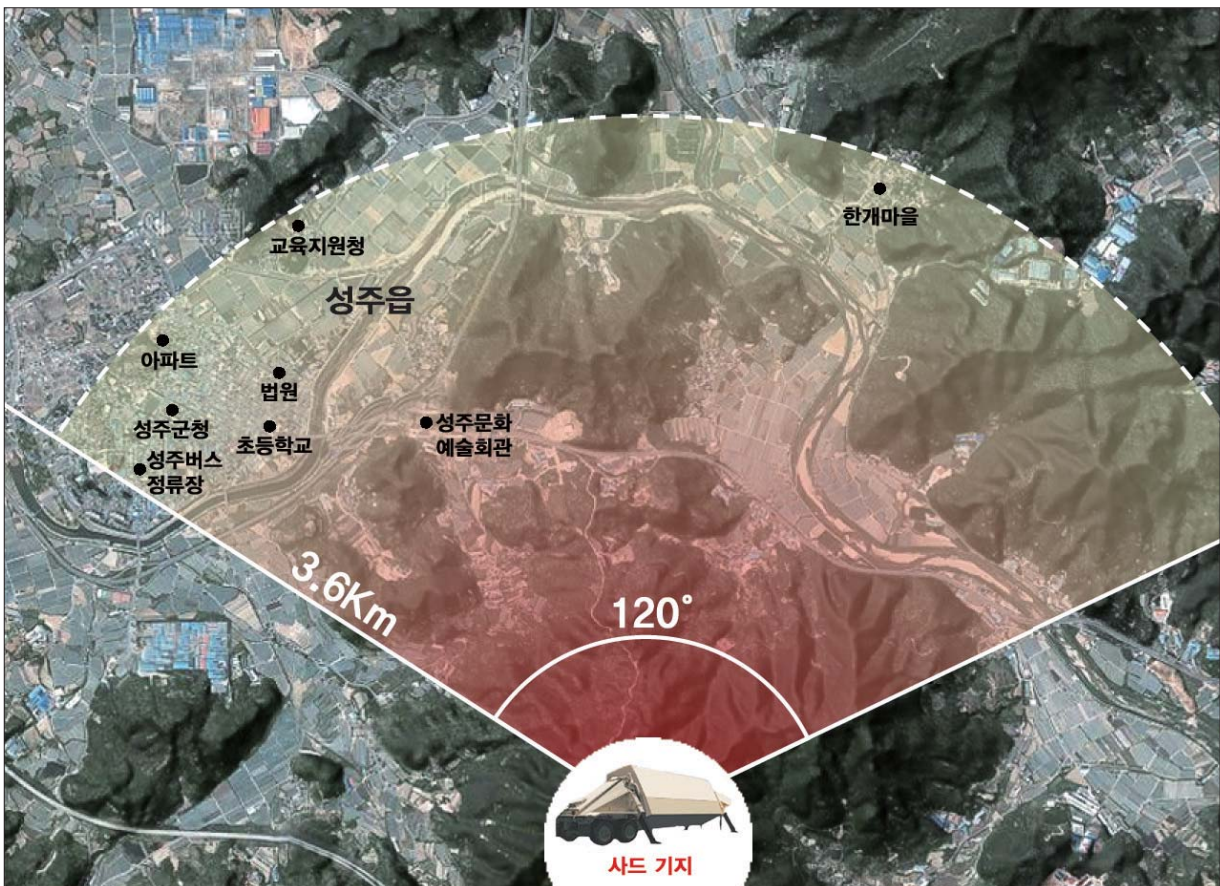
제국주의간 경쟁

러시아는 중국 못지않게 사드 한국 배치에 강하게 반발한다. 사드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도 겨냥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은 MD를 동아시아뿐 아니라 유럽과 중동에도 구축하고 있다. 세계 지도를 펼쳐서 유럽·중동·동아시아 등 미국의 지역 MD가 포진한 형세를 그려 보면, 러시아와 중국을 포위하는 양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 MD의 구축은 나토(NATO)를 동유럽으로 확대해 러시아를 압박하는 동진 정책과 함께 진행됐다. 그런 만큼 러시아는 미국이 MD를 어찌 구축하고 활용해 왔는지를 아주 잘 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사드 한국 배치를 "전 지구적 MD 시스템 전개 지역 확장을 위한" 시도의 하나라면서 맹렬

▶ 3면으로 이어짐



민간인 거주지를 향해 전자파를 쏘는 사드 레이더.

▶ 2면에서 이어짐

하게 반대한다.

사드 한국 배치로 미국이 중국·러시아 등 경쟁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라.’

‘우리 미국은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을 부각시켜 역내 국가들을 동맹으로 규합할 것이다. 그 매개 고리로 MD를 이용할 것이며, 그에 따른 비용도 상당 부분 동맹국들이 부담하게 된다. 너희(러시아와 중국)는 이에 상응하는 군사력 증강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걸 따라잡으려면 재정 부담도 상당할 것이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쉽게 물러설 리 없다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 MD 시스템 요소의 역내 배치는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예브게니 세레브렌니코프는 한국 내 사드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부대를 극동(쿠릴 열도)에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한국을 미사일로 정조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 정부는 사드 한국 배치 발표 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연일 강조했다. 사드와 한·미·일 MD를 겨냥한 군사적 대비책이 강화될 것이다. 올해 초 한미 간 사드 배치 협의가 시작되자, 이에 자극받은 중국은 핵무기 증강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5월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실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중국의 핵무기 수량이 미국·러시아와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우리는

국가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핵 능력을 증가시킬 충분한 정당성이 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의 태평양 상시 배치, 핵탄두 보유량 증대를 촉구했다.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갈등은 사드 한국 배치로 더욱 심화되고 군비 증강 경쟁에도 불이 붙을 것이다. 역내 국가들도 이에 자극받아 덩달아 군비를 늘릴 것이다.

지금 한반도는 동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 간 경쟁의 한복판에 휘말려 있다. 그리고 박근혜는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사드 한국 배치를 추진함으로써 한반도를 진정한 ‘헬조선’으로 몰고 가려 한다. 그에 따른 동아시아 불안정 고조는 오롯이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감내할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 ‘위협’은 명분일 뿐, 진정한 목적은 따로 있다

한미 정부들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사드 한국 배치의 강력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청와대)라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0’의 발사 성공은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 발표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됐다. 사드 배치 결정 발표를 앞두고 미국이 김정은을 제재 대상에 올린 데는 사드 배치의 명분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지난 사반세기의 경험을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의 평화에 악영향을 줬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저항을 건설하는 데도 방해가 됐다.

그러나 한국에 배치될 사드는 북한이 남한을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으로부터의 방어가 목적이 아니다. 사드는 높은 고도에서 떨어지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인데, 남한과 인접한 북한이 굳이

그렇게 높은 고도로 남한을 향해 미사일을 쏘 이유가 없다. 미국 의회조사국도 “남한과 북한은 너무 가까워서 [북한] 미사일이 낮은 궤도로 날아 몇 분 안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사드의 유용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느닷없는 도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미국과 그 동맹들의 강력한 군사력 증강이라는 맥락 속에서 본다면 북한을 동북아와 한반도 불안정의 주범이라고 보는 것이 잘못된 상황 인식임을 알 수 있다.

위키리크스

미국은 북한 ‘위협’을 부풀려서 이를 명분 삼아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해 먹을 뿐이다. 오바마 정부도 한반도 긴장을 동맹 강화와 군사력 증강의 기회로 이용했다. 천안함 사건을 이용해 후턴마 미군기지를 오키나와 밖으로 이전시키려는 일본 하토야마 정부의 계획을 무산시킨 게 대표적이다.

박근혜의 친미 본색

박근혜 정부가 결국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한국 지배계급은 오랫동안 한미 동맹을 통해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이익을 얻고 한국의 국제적 지위 상승을 추구해 왔다. 그 역사가 쉽사리 바뀔 수는 없다. 게다가 안전 보장은 한국 지배계급이 한미 동맹에 매달리는 가장 큰 이유인데, 한국 지배계급에게 중국과의 관계 강화는 한미 동맹이 제공한 안전 보장의 대체물이 못 된다. 오히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이 낳은 안보 위협을 강조하며 한국의 안보 불안을 자극해 왔다.

그렇다고 해서 한미동맹 강화에 관해 한국 지배자들의 견해가 일치돼 있는 것은 아닌 듯 보인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된 현실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7월 5일 <중앙일보>가 국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를 보면, 조사에 응한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은 사드 도입에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응답자 중 58.8퍼센트(50명)만이 “중국의 동의 없이 도입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더민주당 지도부는 “실의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며 사드 배치에 사실상 동의하는 입장을 내놨다. 비대위 대표 김종인은 “미국이 없었으면 오늘날

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며 친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문재인이 사드 배치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사드 배치를 논의하자고 하고,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지만, 모두 신뢰할 수 없는 세력이다. 이들 모두 한미동맹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 강화라는 두 길 사이에서 동요하다가, 결국 미국 제국주의의 이해관계에 타협하게 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더민주당 주류나 국민의당 정치인 다수는 과거에 전략적 유연성,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 등이 불거질 때마다 결국 미국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쪽을 선택해 왔다.

정의당은 심상정 상임대표가 사드 배치 반대를 공식 발표하고 나섰다.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연단을 활용해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적극 폭로함으로써 원외의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이 커지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원외 사드 배치 반대 운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모든 진보·좌파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대중 운동을 건설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특히 노동운동이 중요하다. 그럴 때 사드 배치를 저지할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악화하는 동아시아 불안정

한국이 사드 배치 문제로 시끄러운 와중에, 남중국해에서도 중국과 미국이 살벌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 주장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중재재판은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필리핀이 중국을 제소하면서 시작된 일이었다.

중국은 이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법에 따른 판결을 중국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정작 미국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그동안 무시해 왔다.

그래서 지금 남중국해에 미국 항공모함이 배치돼 있는 한편, 중국도 남중국해에서 최대 규모의 훈련을 벌이고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이지스함 숫자를 늘렸다. 판결에 반발한 중국이 머지않아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고자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선포한 지 불과 6년여 만에 동아시아는 제국주의 간 갈등으로 상황이 크게 나빠졌다. 동·남중국해 일대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노골적으로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 행동을 벌이게 됐으며 양안관계마저도 심각치 않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개헌 세력이 사상 처음으로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모두에서 개헌발의선을 확보하게 됐다. 이제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 개헌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동아시아 불안정이 이런 결과에 영향을 줬겠지만, 아베의 개헌 시도는 또다시 동아시아 불안정을 심화시킬 것이다.

최근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련의 공세적 조치를 펼쳐 왔다. 오바마는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는 베트남에 미국 무기를 수출하도록 무기 수출 금수 조치를 풀어 줬다. 사드 한국 배치도 이런 맥락 속에 놓고 봐야 한다.

최근 동아시아의 불안정한 상황은 장기화하는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른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한 치의 양보 없는 지정학적 경쟁을 벌이는 것은 그만큼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깊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이 불안정은 한동안 계속 심화할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 미래 속에 그 결론이 어찌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가 제국주의에 맞선 근본적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무덤을 팔 수 있는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적 노동자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호중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원 인터뷰

“여야가 특조위 활동에 관해 어정쩡한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6월 30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사실상 종료시켰다. 특조위는 강제 종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출근해 조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호중 특조위원(유가족 추천 비상임위원,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만나 현재 상황과 계획에 대해 들어 봤다. 이호중 교수는 말시즘 2016에서 '세월호, 국가 폭력, 진실규명 운동'을 주제로 연설한다.



정부가 특조위 조사활동을 결국 강제 종료시켰습니다.

파견 공무원들은 철수했지만 조사관들은 남아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월급은 고사하고] 조사관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관계자들도 만나고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조차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9월 30일까지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이고 이후에는 기관 청산 기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무실을 정리하는 등 수순을 밟게 됩니다. 따라서 특조위 활동에서 9월 말이 분기점이 될 것이라 봅니다. 특조위는 7월부터 9월까지 최대한 조사관들의 역할을 집중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대외적인 활동도 힘껏 하려고 합니다.

6월 말 특조위가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철근이 세월호에 과적됐던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관련한 조사들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정부 기관들이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조사관들이 세월호에 실리는 화물들을 CCTV 영상으로 하나하나 살펴면서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제까지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철근은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항로만 있다고

했는데 조사를 통해 그것이 아님을 밝혀낸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이 사실을 숨겨 온 것이 큰 문제입니다.

특조위가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조사해야 할 쟁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청해진해운은 과거에는 해군기지 건설 자재들을 어떻게 운반했고 그 과정에서 해군과 국경원의 구실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날 세월호만 출항을 했는데 출항 결정을 하는 데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을 실은 것이 영향을 미쳤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특조위가 조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정부기관들의 비협조와 방해로 충분히 조사하지 못한 것들도 많습니다.

청와대의 KBS보도 개입도 폭로됐고 특조위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환영 전 KBS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청와대가 보도 통제를 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특조위가 고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상 조사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단독으로 한 일일까요? 그 배후는 없을까요? 조직적으로 한 것은 아닐까요? 과연 KBS에만 보도 개입을 한 것일까요? 밝혀야 할 일들이 여전히 매우 많습니다.

최근 특조위는 8월에 청문회를 열겠다고



끝까지 함께 종료 선언에 굴하지 않고 출근하는 특조위원들을 유가족들이 격려하고 있다.

발했습니다.

정부는 종합 보고서 작성 기간이라고 우기지만, 특조위는 진상조사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자료나 출석 요청 등을 하면 특조위 조사관은 이제 공무원이 아니라며 협조할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문회에도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조위의 조사 권한이 매우 미약하다는 점이 그간 활동에서 어려움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공문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답변도 없다가 재촉하면 그제서야 별로 영양가 없는 자료를 보내는 일들이 많았죠. 그렇게 몇 달씩 걸리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들을 특조위가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권한 자체가 워낙 약하다 보니 근본적 한계가 분명

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사해야 할 쟁점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조사활동의 연장에서 청문회 주제에 대해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에어포켓을 시도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알려진 일이나 참사 직후에 해경이 선원들을 경찰 조사 전에 따로 수사관 집에서 재운 일, 경찰이 진도 체육관을 사찰한 일 등 참사의 진상을 조작하고 은폐하려 한 것도 진상조사의 중요한 대목입니다. 관려해서 언론 통제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해경과 청와대 등 책임 기관에 대한 실지 조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위한 조사를 하고 공개토론회도 하면서 특조위가 조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정부 기관이 특조위의 조

사활동 종료로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방해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조직적인 진실 은폐를 폭로하고 특조위 활동의 필요성 등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농해수위에서 더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이 특별소위를 꾸려 특별법 개정이 아닌 조사기간 연장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나요?

특별법이 제정될 때 조사기간으로 적어도 1년 6개월은 필요하다는 것이 정치적 합의였습니다. 충분하고 실질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기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조위가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때가 2015년 8월 중순이었습니다. 지금 1년도 되지 않은 것이죠. 1년 6개월도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긴 하지만 특별법의 정신을 살려서 적어도 1년 6개월의 조사기간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보장할 것, 그리고 인양 후 최소한 6개월은 선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야의 어정쩡한 정치적 합의로 몇 개월 연장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합의가 나온다면 특별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해수위 세월호특별법소위에서 특별법 개정보다 법 해석을 통한 기간 연장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야당이 특별법 개정의 의미나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 운동] 여야가 특별법 개정이 아닌 조사 기간의 일부 연장 수준으로 함부로 합의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뷰·정리 김지윤

단원고 기억교실은 원형 보존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로 죽은 단원고 학생 2백50여 명이 공부했던 2학년 교실, 우리는 이를 ‘기억교실’(교실 10개와 교무실 1개)이라고 부른다. 참사 이후 이 공간은 희생 학생들의 유품과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

교실 존치는 참사의 아픔과 교훈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함이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도, 미수습자 수습도 안 된 상태에서 아이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있는 공간을 지을 수는 없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죽은 자식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주류 언론들은 단원고 기억교실 존치 문제를 유가족 학부모와 재학생 학부모의 갈등으로 그리거나 유가족의 교실 존치 요구가 이기적인 요

구라는 뉘앙스로 보도한다.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들은 신입생을 받고 재학생의 공부를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왔다.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12개의 교실을 확충할 수 있는 교실 증축과 재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기억 교실을 학교와 차단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은 우리의 안을 행정적인 이유로 거부했다. 만약 신입생을 못 받는 상황이 된다면 그게 정말 우리 유가족 탓인가?” 하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실제로 한 일은 유가족이 바라지도 않은 것들이었다. 단원고를 “혁신학교”로 지정한다거나, 희생 학생들의 명예 졸업식 선물로 유가족에게 금 한 돈을 하



이기주의? 비극의 반복을 막으려면 때로 비통함도 기억돼야 한다.

나씩 나눠주려고 했다. 따라서 재학생 학부모와 유가족 학부모 사이의 갈등으로 모는 것은 진정한 쟁점을 묻어버리는 것이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결국 온전한 진실을 다루지 않는 언론의 여론 몰이 때문에 유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기억교실을 안산교육

지원청으로 원형 그대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해 5월에 약속한 이 합의에 대해, 올해 재학생 학부모 측이 “등교 거부도 불사할 수 있다”며 약속을 깨뜨리는 일이 수차례 벌어졌다. 교실 이전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유가족들이 “교실 원형 보존” 요구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약속한 내용에는 “교실 재현”이 포함돼 있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

그러나 기억교실은 원형 보존돼야 한다. 그토록 많은 생명이 무고하게 세상을 뜬 체제의 참극을 잊지 않고 세월호 이전과는 다른 이후를 만드는 활동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승주 대학생,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세월호 참사

정부의 미국 패권 지원에 책임 있다

최영준

박근혜 정부는 7월 1일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켰다. 특조위 조사활동 예산 지원을 중단했고, 지난해 배정받은 예산 중 남은 예산을 손대지 말라는 협박 공문을 특조위에 보냈다.

이에 맞서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2백11명을 심층면접,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7월 20일에 열고 8월 23~24일 3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변도 “특조위 강제 해산은 위헌”이라며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유가족과 4·16연대를 비롯한 세월호 운동이 지난 몇 달간 ‘특조위 강제 종료 중단, 특별법 개정,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요구하며 정부의 방해 공작에 맞서 싸우자, 특조위도 이에 호응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유가족들은 지난 6월 25일부터 8일간 노숙 농성을 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대한 대중의 이목을 끌어들였다.

또, 제주 해군기지 철근 과적,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보도 통제 등이 폭로돼 특조위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 활동이 지속돼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박근혜 정부가 서둘러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키려 한 진정한 의도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박근혜는 특조위를 강제 종료시켜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기를 꺾고 국회 내 특별법 개정 논란을 잠재우려 했지만 상황은 뜻대로 되고 있지 않다.

야당의 특별법 개정 포기 움직임 — 지금은 후퇴할 때가 전혀 아니다

6월 30일 정부가 특조위 강제 종료를 선언했지만 새누리당과 더민주



배신 박근혜는 참사 직후 보인 일방적인 동정의 표현들마저 거두고 진상을 파문하려 한다. 야당은 또다시 이에 굴복하는 배신을 하면 안 된다.

당·국민의당은 특조위 조사기간 연장을 두고 협상을 시작했다. 해수부도 여야 합의를 따르겠다는 의견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내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 특조위 조사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는 안을 놓고 협상 중이다.

그러나 국회 농해수위는 특별법 개정 문제는 외면한 채 특조위 조사기간 연장만 다루려 한다. 분명히 말하건대, 특조위 조사 기간은 법이 정한 대로 내

년 2월까지다. 여야 간 협상을 통한 연장 문제가 아니다.

또, 세월호 인양 후 특조위에 선체 정밀 조사 권한을 줘야 하고 인양 후 6개월에서 1년까지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수십만 명이 입법 청원했던 특별법 개정의 핵심 내용들을 야당이 멋대로 칼질해서는 안 된다.

더민주당·국민의당은 특별법 개정 투쟁을 하기도 전에 새누리당이 특별법 개정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특조위 조사 기간만이라도 연장하는 게 상

책인 양 본다. 그러나 만약 야당이 특별법 개정은 외면한 채 특조위 조사기간 연장만 여당과 합의한다면, 이는 특조위 활동 연내 종료를 합의하는 꼴이 된다.

세월호 운동 내 일부 리더들도 야당의 생각에 동조한다. 그러나 2014년 특별법 제정 투쟁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시 새누리당이 수사권·기소권 포함한 특별법을 거부하자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거듭 후퇴했고, 세월호 운

동 내 온건파 리더들은 야당을 추수했다. 결국 야당의 배신적 타협으로 유가족들은 사기저하됐고, 울며 겨자 먹기로 수사권·기소권 없는 반쪽짜리 특별법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 때문에 진실 규명 활동은 먼 길을 돌아가야 했다.

416가족협의회 유영근 집행위원장은 “2014년 특별법 제정 때 야당이 세 차례 유가족들을 배신한 일이 기억난다”며 특별법 개정의 핵심 내용 중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선심 쓰듯이 12월 까지 기한을 연장해 주겠다는 국회의 의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옳다!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광범한 평범한 사람들의 문제다. 여야 협상 수준에 따라 진실 규명 활동이 제약돼서는 안 된다.

물론 세월호 진상 규명 운동은 국가 권력을 상대로 싸우는 것인 만큼, 지난한 과정을 거칠 것이고, 국절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특별법 개정 같은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장치를 하나 둘 양보하다 보면 오히려 대중이 실망할 것이고 운동의 동력도 약해질 것이다.

따라서 국회 상황 논리를 앞세우는 더민주당·국민의당의 후퇴 시도를 분명하게 비판하며 이들과 독립적으로 진상 규명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는 특별법 개정에 대한 광범한 지지, 제주 해군기지 철근 과적과 청와대 보도 통제 폭로로 궁지에 몰려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요구를 삭감해야 하는가? 지금은 자신감을 갖고 굳건하게 특별법 개정 투쟁을 이어갈 때다.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그들도 제자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선생님이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됐지만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 유가족이 순직 인정 요구 소송을 시작했다. 정부는 2014년 7월 순직 인정을 받은 정규직 희생 교사들과 달리 김초원·이지혜 교사가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거부했다. 이 두 명의 선생님은 죽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수행 업무와 보수 지급 여부의 계속성을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면 순직 심사 또한 가능하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제대로 된 근거도 대지 않은 채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뻔뻔하게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의뢰한 법률자문단,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심지어 국회입법조



“선생님, 생일 축하해요” 사고 전날, 학생들이 세월호 안에서 김초원 선생님의 생일 파티를 연 모습.

사처에서도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말이다.

국가는 이렇게 선생님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비정하게 분리하지만, 참사 당시 세월호 안에서는 정규직과

기간제 가릴 것 없이 모든 단원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제 한 몸 돌보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구조 활동을 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중 생존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이 교사들이다. 선생님들은 “애들 한 명이라도

더 내보내고 나가겠다”며 더 아래 층으로 내려가 자신의 구명조끼를 학생에게 입혔다.

학생들에게 친구처럼 친근했던 김초원 선생님은 4월 16일이 생일이였다. 김초원 선생님은 끝까지 배 안에 남아 있다가 결국 학생들이 생일 선물로 준 목걸이를 한 채 시신이 뒤편에 올라왔다. 이지혜 선생님 또한 탈출이 가능했던 시점과 장소에 있었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4층으로 내려가 아이들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줬다.

어떻게 이 모든 고귀한 희생들에 차별을 둘 수 있는가?

계약직 교원 증대 정책

현재 인사혁신처가 두 명의 기간제 희생 교사를 공무원으로 결코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교육재정 감축과 계약직 교원 늘리기 정책과 관련 있을 것이다.

올해 초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기

간제 교사는 전체 교원의 10퍼센트를 웃돌고 있다. 이 수치는 2012년 이후 기간제 교사가 해마다 1천여 명 이상 증가한 결과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이 추세가 두드러진다.

또, 박근혜 정부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면서 시간제 교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혀 왔다. 시간제 교사 늘리기가 청년 실업의 대안이라고 호도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의 당사자이자 상주로서 세월호 교과서를 발행하고 계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육과 사회를 바꾸기 위한 싸움에 동참하고 있다. 전국에서 4만 명이 넘는 기간제 교사들 또한 이런 싸움의 일부가 될 수 있다.

희생된 기간제 교사 유가족들의 순직 인정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지와 관심을 보내자.

김승주 대학생,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노동운동 ‘대표성 위기’론, 어떻게 볼 것인가

김문성

민주노총은 8월 정책 대의원대회 준비 과정을 포함해 정책대대를 “조직 강화를 위한 토론 투쟁”이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여러 대안들을 치열하게 검토하고 토론해 보자는 취지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노동운동의 ‘대표성 위기’ 문제도 다뤄진다. 경제 불황과 신자유주의로 조직 ‘노동계급 대표성 위기’가 심화됐고,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조 운동’이 됐다는 주장이 일각에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직)노동운동이 고립됐다는 것을 진실로 보기 힘들다. 가령 박근혜와 지배계급 단체들이 ‘노동개혁’을 해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열띠게 홍보해 왔지만, 다수가 이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 우익 언론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조차 ‘박근혜의 노동개혁이 일자리에 도움이 안 된다’는 답이 과반인 55퍼센트를 넘었다. 총선에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보가 노동개혁과 구조조정 저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울산과 경남 창원에서 집권당 현역 의원들에게 압승을 거둔 것도 마찬가지 방증이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한데, 최근의 위기 담론은 노동운동의 ‘고립’을 ‘대표성의 위기’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인으로 지목되는 ‘대표성의 위기’를 살펴봐야 한다.

대표성의 위기 담론에는 이론적·실증적으로 두 가지 쟁점이 깔려 있는 듯하다. 하나는 더는 노동계급이 ‘다른 피억압 민중보다 더 힘이 있으며 사회변혁에서 중심 구실을 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노동계급 중심성에 대한 반대·기각’으로도 표현된다.

또 하나는 노동계급 안에서 노동조합 또는 조직 노동계급의 기여가 대단하지 않고 하찮아졌다는 것이다. 낮은 조직률이나 계급 내 격차가 커졌다는 주장이 근거로 제시된다.

두 주장은 종종 서로 결합된다. 그릇된 가정으로서, 노동조합이나 정당으로 조직된 노동계급이 노동계급 전체를 대표하는 주체로 형상화된다. 따라서 조직 노동운동이 충분하게 경제적·정치적 힘을 보여 주지 못하면 노동계급 그 자체의 힘과 주도성도 의심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 더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는데, 노조나 정당을 매개로 조직 노동계급을 소위 대표한다는 상근 지도자들(고위 간부층)의 존재다. 이들은 개혁주의의 행위주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민주노조 운동 내부에서 현장 조합원과 상근간부층의 분화가 점점 더 예리하게 일어났다. 1987년 대투쟁 이후 대중적이고 전투적인 노동운동이 한국 자본주의의 주요 산업에 등장해 조직되면서 국가형태의 변화(권위주의 → 부르주아 민주

주의)가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저변 확대와 정치의식의 성장, 개혁주의 정당 건설 등의 정치적 전진이 있었다.

노사간 교섭 구조의 정착 등에 기초해 노동조합 안에서도 목적의식적으로, 아래로부터의 투쟁보다 협상을 전문으로 추구하는 고위 상근간부층이 형성돼 안착했다. 조직 보존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수준으로만 투쟁을 통제하는 자기제한적 보수성, 정치와 경제의 목적의식적 분리를 추구하는 경제주의·부문주의, 투쟁 대신 선거와 의회를 통한 대화와 타협을 더 중시하는 사회적 합의주의(와 이를 돕는 담론들) 등이 오늘날 노동운동 개혁주의의 주된 형태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노조 운동의 계급 대표성 문제는 이 고위간부층이 주도하는 개혁주의 노동운동의 실천과 전략이 대표성을 제대로 구현하느냐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노동계급의 객관적 변화 문제와 정치적 합의들에 관해서는 <노동자 연대>에 실린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계급은 분절되고 파

편화됐는가? — 임금 격차, 노동조합, 그리고 연대”(173호) “21세기에 노동자 계급은 약화됐는가”(175호) 등이 매우 잘 다루고 있다.)

조직률

민주노총은 ‘2016년 정책대의원대회 현장 토론회’에서 “전체 노동자 대비 조직률은 한국노총 4.3%, 민주노총 3.5%, 기타 미가입 노조 2.2% 수준임. 즉 민주노총의 3.5% 조직률로 전체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주장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더 많은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해 행동에 나서는 것은 좋고 필요한 일이다. 노동자들은 스스로 조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계급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고,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의 자력 투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률이 낮다고 해서 노동운동이 계급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간 단축이나 노동개혁 저지 등 노동계급 전체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법 개정(또는 개악 저지)을 위해 조직력(그리고 투쟁력)을 진지하게 동원하는 것도 계급을 대표하는 행위다.

반대로 노조 조직률이 높아도 제때 투쟁을 하지 않거나, 지도부가 배신적 타협을 하고 실망을 준다면, 노조는 계급 대표성은커녕 노조 내 대표성도 훼손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조직률이 한때 50퍼센트가 넘던 영국노총(TUC)은 1970년대 후반 노동당 정부와의 협력에 집착하다가 노동당 정부의 공격에 제대로 맞서지 못해 운동 자체가 약화됐고, 결국 대처주의 공세에 큰 타격을 입었다. 2000년대 이후 독일과 스페인에서도 노조들이 노동개

악에 합의해 주고 약화됐다. 사용자의 공세와 노조의 신뢰(대표성) 추락이 조직률 하락을 낳았다.

따라서 계급 대표성은 조직률 같은 형식적 지표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계급 전체의 이익을 위해 투쟁을 잘해서 성과를 냄으로써 쟁취해 나가는 지도력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국노총이 민주노총보다 조직률이 조금 더 높지만, 우파 정권에 너무 타협적인 한국노총에게 계급 대표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많지 않은 이유다. 최근 곳곳에서 노조 가입 자체가 탄압받는 경우들을 봐도 조직률 향상을 위해서라도 투쟁과 성과의 문제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직률은 간접적이고 사후적인 지표로 봐야 한다. 대표성 쟁취에서도 투쟁성이 더 중요한 것이다. 1997년 정리해고 등 노동법 날치기 철폐 파업은 노조를 강화하고 대표성을 높였다. 민주노총 상근간부층의 정치세력화 프로젝트였던 민주노동당이 노동자들의 대표 정당처럼 인식된 것도 그런 경험들이 누적된 것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반면 한국노총은 2002년 민주사회당을 창당했으나 별 성과없이 2년 만에 해산했다.)

그러나 정리해고 등을 철폐시킨 지 딱 1년 만에 당시 민주노총 배석법 비대위는 ‘IMF 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분담을 한다’며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 정리해고 등의 도입에 합의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즉시 이 합의를 부결시키고 당시 좌파인 단병호 비대위를 선출했으나 이 비대위 역시 굴복해, 총파업을 철폐했다. 그해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다시 좌파인 이갑용 씨가 선출됐으나 관료 기구의 무사안일로 제대로 투쟁이 조직되



급진적 투쟁과 커다란 성과로 계급 대표성을 쟁취한 1987년 대투쟁.



자기 이익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투쟁으로는 계급 대표성도 높일 수 없다.

지 않았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현장에서선 좌파, 당선하면 우파”라는 냉소가 나오게 된 것이다. 2002년 발전노조 파업, 2006년 비정규직 약법 반대 파업, 2007년 이랜드 점거파업, 2009년 쌍용차 점거파업 등에서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연대 투쟁(파업)을 약속했지만 실행되지는 않았다. 이 투쟁들은 여론의 지지를 받았고, 조합원들도 그만큼 관심과 지지가 컸는데도 말이다.

이런 자기제한적 회피와 보수주의, 배신적 타협의 경험이 누적되면서 민주노총의 대표성은 미조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뿐 아니라 자기 조합원들에게서도 조금씩 약화됐다. 계급 대표성과 제대로 된 투쟁 건설의 문제는 노조원 대 비노조원이 아니라 노조의 고위 상근간부층 대 기층 노동자라는 구도에 비취 볼 때 더 선명하고 잘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노조 운동의 대표성 위기는 날로 강경해지는 정부와 기업주들의 공세에 맞불을 놓을 만큼 강력한 투쟁을 하는 것을 그 지도부가 꺼리는 데에 있다. 민주노총은 특히 수출 대기업들과 핵심적인 공공부문에 집중적으로 포진해 있어 잠재적 힘 자체는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힘이 없어서는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 위기는 기존의 노동조건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의 투

지를 자극하기도 하지만, 실업의 위험은 개별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운동의 지도부가 명료한 이데올로기와 집단적 투쟁의 정치를 강조해야 한다. 그런데 지도부들의 보수주의가 그런 확신을 충분히 못 주는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은 반감은 있지만, 지도자들이 파업을 취소할 때 아래로부터 투쟁을 직접 건설할 자신감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지배자들의 고통전가에 대한 반감도 크기 때문에 지도부가 진지하게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투쟁 호소에 응할 태세는 돼 있다.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표출되는 최근의 노동자 투쟁 분위기는 적어도 현장의 투지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님을 보여 준다.

결국 대표성이 의심받는 것은, 제대로 싸워서 정부와 기업주들의 공세를 좌절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조직률이 대표돼야 노조가 명분과 힘을 가지고 정권과 자본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상황을 거꾸로 보는 것이다.

아무리 여론의 지지와 사회적 명분이 노동운동에 있어도 정부와 기업주들은 대놓고 무시하기도 한다. 이라크 파병, 비정규직 약법, 미국산 쇠고기 수입, 진주의료원 폐쇄,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 배치 등은 명분과 여론의 지지가 있어서 정부들이 강행했던 게 아니

다.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박근혜가 성과연봉제 도입이나 노동개약 강행을 추진하겠다고 설치는 걸 보라. 경제 위기 때문에 기업주들이 노동자를 공격해 이윤을 만회하려 애쓰고, 제국주의 간 갈등이 고조돼 대외적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가가 이렇게 나올수록 그에 맞선 실질적인 압력이 아래로부터 가해져야 한다. 조직률 높이기보다 얼마나 실질적으로 투쟁에 힘쓰냐가 훨씬 더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계급 내 격차와 투쟁

대표성 위기와 관련해 노동계급 본질을 강조하는 주장도 있다. 그런 주장의 요지는 이렇다. ‘노동계급 내부 격차가 커져서 이제는 하나의 계급으로 부르기도 힘들 정도다. 애초에 가입하기 쉽거나 상대적으로 지불 능력이 있어 노조를 허용할 수 있는 기업에 주로 노조가 있다. 그 노조는 자기 조합원 이익만 챙긴다. 따라서 기존 노조는 대표성이 없고, 굳이 미조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할 이유도 없다.’

이런 분절론을 받아들이면 개별 노동조합의 경제투쟁 자체를 문제 삼는 길로 가기 십상이다.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따내는 것은 계급 내부 격차만 더 벌릴 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논리적 결론은 노동자들이 투쟁을 자제하고 자기 임금 늘리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는 개혁주의 지도

사회적 고립을 피한답시고 조직 노동계급이 고유의 투쟁 방식을 자제하고 자기 이익을 희생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계급 전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들의 보수성과 투쟁 회피주의가 낳은 문제점을 더한층의 개혁주의로 해결하자는 퇴행적 해법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경험에 의해 반증된다. 노동조합 운동의 존재가 미조직 노동자를 포함한 전반적 임금 인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많다. “한국에서 최소한 제조업 부문에서는 노동조합의 존재가 같은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불평등과 노조 사업체 간에 임금불평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산업 전체적으로도 임금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강승복·박철성 2014, 〈임금 분산에 대한 노동조합의 효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따라서 사회적 고립을 피한답시고 조직 노동계급이 고유의 투쟁 방식을 자제하고 자기 이익을 희생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계급 전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제 위기 시대에 비용(특히 임금비용) 절감에 혈안이 된 기업주들은 양보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 쉽게 양보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투쟁을 수습어하고 회피해 자기 이익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투지와 사기는 떨어질 것이다. 다른 노동자들을 자극·고무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이익도 제대로 못 지키는 노조나 자기 이익만 겨우 지키는 노조, 그 어떤 경우도 계급 대표성을 높이기 어렵은 것이다. 오히려 지배계급이나 중간계급 친화적 사상들이 사기가 떨어진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조직 노동운동을 고립시키기가 쉬워진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투쟁 때 이충재 당시 공무원노조 집행부가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를 회피하고 급기야 포기하면서 노동개악 저지 전선(노동계급) 전체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운동 내 분열만 커진 일이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런 분절론과 양보론에는 노동자 상당수가 스스로는 임금 인상, 고용 안정 등을 쟁취하기 어렵다는 가정도 깔려 있다. 이처럼 노동자들 스스로 자기 처지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보는 비판주의는 편협한 부문주의를 강화한다.

이런 위험들을 피하려면, 노동자들이 자기 이익을 지키는 투쟁을 하는 것과 협소한 부문주의를 구분해야 한다. 자기 이익을 지킬 줄 아는 노동자들의 자신감이야말로 계급 전체가 수행해야 할 정치투쟁의 중요한 자산이다.

문제는 노동조합 자체가 부문에 기초한 조직인데다가, 일상적 시기에 노조 운동을 지배하는 것이 개혁주의이므로 노동자들이 경제투쟁을 잘 수행하면서 그것이 더한층의 정치의식과 계급적 연대 투쟁으로 나아가도록 하려면 모종의 의식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좌파의 책임이 있다.

안타깝게도 최근 많은 좌파들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경원시하거나 임금체계나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같은 투쟁에 별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벌개혁이나 최저임금 문제를 강조해 왔다. 이는 노동계급의 이익이라는 관점에 기초하지 않고, 노동계급을 민중(다양한 피억압 계급들)의 한 부분으로만 여기는 민주주의 전략과 타협하는 것으로, 좌파로서는 일종의 후퇴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중요성은 노동계급만이 자신의 이익과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일치시킬 수 있는 계급이라는 데에 있다.

정리하면, 조직 노동운동은 지금 고립돼 있지 않다. 노동계급의 잠재적·객관적 힘은 여전히 강력하다. 그러나 개혁주의 지도부의 자기제한적 정치가 효과적 투쟁을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약점을 극복하려면 노동운동에는 혁명적 정치와 효과적인 전략·전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운동 안에서 구현하는 것을 자기 임무로 삼는 사회주의 조직이 필요하다.

✂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중고등학교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3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5만 원 이상 ()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주디스 오어 방한 특집 섹슈얼리티와 투쟁

보통사람들에게 진정한 성 해방을 이룰 힘이 있다고 주디스 오어는 주장한다. 주디스 오어(사진)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SWP의 중앙위원이고, 여성 해방사, 낙태, 이혼에 대해 많은 글을 썼으며 《여성차별과 자본주의》(노동자연대)와 《마르크스주의와 여성해방》(책갈피, 근간)의 저자이다. 그는 방한해 7월 21~24일 노동자연대 단체가 주최하는 말시즘2016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차별을 설명할 수 있는가?', '여성 차별과 해방', '오늘날 제국주의와 전쟁' 등을 주제로 연설한다.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성 해방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데, 이는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뒤를린 성 관념은 허공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관념은 계급사회의 일부인 차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섹스는 인간에 고유한 본성의 일부이다. 섹스는 누구와 어떻게 하든 즐길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삶의 긍정적 요소가 돼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섹스는 뒤를리고 소외된 것이 됐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여성에게 떠맡기는 역할 때문에 섹슈얼리티는 중요한 장점이 된다.

여성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사람으로서 가족 안에서 핵심 구실을 한다. 지배 계급은 가족을 이용해 현 상태를 존속시켜려 한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문제제기는 위험으로 여겨진다. 바로 이 때문에 성소수자들이 차별을 당한다. 또, 바로 그 때문에 특히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매우 엄격한 감시를 받는다.

이에 맞선 투쟁들이 있었고, 그 투쟁들은 성적 개방과 자유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그 성과들도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뒤를린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 어느 때보다 노골적인 방식으로 대상화되고 있다. 여자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여성이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성취는 성적 매력이라고 배운다. 여성은 자기 몸을 찢고 깎아서라도 이성적으로 여겨지는 몸매를 가져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나 사회주의 운동과 급진적 운동들은 성 해방을 이루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 줬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많은 여성들은 여성해방 운동에 참가했다. 그 여성들은 앞 세대 여성과 남성들이 정취하기 위해 싸웠던 사상—스탈린주의의 악영향 하에 질려있던—을 재발견했다.

역사학자 쉐러 로보섬은 19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성 해방을 위해 분투한 여성들의 가슴 떨리는 투쟁에 대해 썼다. 그 여성들은 여성을 수동적인 남성 성욕 배출 대상으로 보는 인상에 맞섰다. 그 여성들은 남편이 아닌 상대들과도 성관계를 맺고, '합리적 의상' 꼭 끼는 코르셋을 빼제하고 자전거 타기 등에 적합한 활동적 옷을 입었다. 어떤 여성들은 다른 여성과의 사랑 속에서 행복을 발견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혁명가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여성 노동자들을 사회주의 운동의 일부로 조직했다.

그런 혁명가들 중에는 러시아의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독일의 클라라 체트킨이 있다. 콜론타이와 체트킨은 여성 대중이 해방되려면 여성 차별이



뿌리 내리고 있는 물질적 토대를 분쇄해야 한다고 봤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뒤의 급진무는 반혁명을 물리치고 공평한 대중에게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혁명은 짧았을지언정 새 생활방식을 실행하는 무대이기도 했다. 여성들의 삶이 빠르게 달라졌다. 혁명 전에는 농민 가정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채찍질하는 것이 합법이었다. 그러나 혁명 뒤에는 결혼과 이혼이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할 수 있는 일이 됐다. 낙태가 합법화됐다.

콜론타이는 이렇게 말했다. “섹스는 부끄럽거나 죄스러운 일이어서는 안 된다. 섹스는 건강한 유기체의 다른 필요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한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 말이다.” 보육시설과 공공식당이 문을 열어 개별 가족이 짊어지던 부담을 일부 가져갔다.

혁명이 패배하자 여성은 다시 사사화(私事화)된 가정으로 떠돌았다. 섹스는 즐거움이 아니라 다시 출산을 위한 행위가 됐다.

여성들이 오래된 낡은 성관념에 문을 제기한 것은 혁명 때문이 아니다. 역사의 모든 시기에 그랬다.

양자대전이라는 사회적 격변은 여성의 삶을 크게 바꿨다. 그전에는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일자리를 여성도 가질 수 있게 됐다. 일자리를 갖게 된 여성들은 금전적으로 독립하게 됐고 또 다른 변화의 가능성도 느끼게 됐다.

양자대전 사이 동안,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상대와 섹스하는 사람이 급증했는데, 종전 후에도 그 비율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1945년 태어난 아이의 3분의 1이 비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었다. 섹스와 피임에 관한 책자와 정보를 공공연히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많은 기존 여성에게 섹스는 해마다 임신하고 출산하는 일이었다. 구술사 서적에는 자녀를 많이 둔 노동 계급 여성이 “이제 남편이 너무 자주 괴

롭하지 않아서 안심”이라고 말하는 대목들이 기록돼 있다.

비혼모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다. 그 여성들은 자녀를 “아비 없는” 자식 만들지 말고 입양 보내서 자신의 “광축한” 성행위를 숨기라는 압박을 받았다.

1960년대 말 여성 대중은 믿을 만한 피임 도구를 이용하고 안전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획기적 진보였다.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들은 원치 않는 임신 걱정 없이 섹스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여성운동과 동성애자 운동의 부상은 사람들이 또 다른 기대를 품었음을 보여 줬다. 성 해방을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 빈곤,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의 일부가 됐다.

이 투쟁들이 함께 권리를 성취한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그 권리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성 해방을 이루려면 차별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제거해야 한다.

대중적 항쟁이 벌어지면 제 아무리 뿌리 깊은 편견이어도 도전은 받는다. 혁명이 칼 마르크스는 체제를 타도하려면 혁명적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노동계급 자신이 “오래된 오물을 털어내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에 적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도 혁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진정한 해방을 이루려면 보통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투쟁은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자신감과 창의성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 잠재력이 있다.

이런 변화는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무슨 글을 읽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생활방식 문제도 아니다. 차별은 사람들의 머릿속이 아니라 사회의 물질적 조건에 뿌리 내리고 있다. 마르크스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해방은 역사적 행위이지 정신적 행위가 아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회주의자는 지령을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사회주의자는 인생을 살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단 하나의 이상적 방식이 있다고 믿는다. 사람들이 정말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관계가 생겨나 발전할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모두 복합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차별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번역 차승일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2321호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의 토착화였다.

여성 차별에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여성 차별이 계급사회의 산물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주디스 오어가 주장한다.

여성들은 성 상품화나 남녀 임금 격차처럼 삶의 온갖 측면에서 차별을 겪는다. 2013년에 발간된 <성과 권력>이라는 보고서는 영국 정치권에서 여성 대표자의 비율이 되레 줄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의 지위가 낮은 것에 정당하게 분노하며 이런 현실을 바꾸고 싶어 한다. 그리고 정치 행동에 참여하면서 흔히 페미니즘 사상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사회주의자는 여성 차별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한다. 우리는 낙태권을 지키고, 평등한 임금을 요구하고, 제도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운동을 함께 건설한다. 그러는 동시에 사회주의자들은 차별을 계급으로 환원해서는 안 되지만 여성 차별은 계급사회의 출현과 가족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래 전부터 페미니즘에는 아주 다양한 정치 경향이 섞여 있었다. 그럼에도 페미니즘은 사회의 근본 분단선이 계급으로 나뉜다는 견해에 반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뉜 사회를 이해하는 것을 가장 중시한다.

여성 차별과 관련해 새롭게 제기되는 쟁점도 있지만 과거에 제기된 주장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차별이 남성과 맺는 개인적 관계에서 비롯한다고 주

장한다. 또, 남성이 여성 차별로 득을 본다고도 주장한다. 또 다른 페미니스트들은 남성과 여성의 단결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남성이 여성 차별로 득을 본다고 보며(여성이 집안일을 더 많이 맡는 등) 단기적으로는 차별을 유지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성 차별 등 성차별은 노동자들을 서로 대립하게 만들어 노동계급을 약화시킨다. 그러면 지배자들이 평범한 사람들(남녀 불문)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그 공격의 효과가 단기적인 것일지라도 말이다.

상이한 계급사회에서 가족제도가 한 구실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 [자본주의에서] 가족제도는 개별 남성들이 아니라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가족제도 덕분에 지배계급은 다음 세대 노동자를 재생산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배자들이 가족제도를 유지하는 데 공을 들이는 이유다.

가족의 형태는 변하지만 가족을 둘러싼 이데올로기나 가족이 수행하는 경제적 구실은 변치 않는다. 전 영국 총리 캐머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장 좋은 복지제도의 이름이 된지 아십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지배자들은 노동계급이 성별과 무관하게 모두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한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현 체제의 유지가 자신들에

게도 이롭다고 생각하길 바란다.

지배자들은 남성이 체제 덕분에 득을 본다는 생각을 부추기고, 그 결과 일부 노동계급 남성은 여성 차별이 자신에게 득이 된다고 여긴다.

의식

그러나 일부 남성 노동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과 실제 현실이 그렇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썼듯이 “만약 사물의 현상과 본질이 일치한다면 과학은 불필요할 것이다.”

노동계급 남성의 객관적인 이익은 노동계급 여성과 단결해서 지배자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더 나은 세계를 위해 투쟁하는 데 있다.

체제가 아니라 개별 남성의 태도 문제에 치중하는 것은 여성 차별의 근원이 남성 권력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모든 남성이 여성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통칭 ‘가부장제’ 이론으로 불리는 이 관점은 사회의 결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여성 차별이 어디에서 비롯했고, 그 본질은 무엇이고, 자본이 여성 차별로 어떻게 득을 보는지를 이해하는 데서는 도움이 못 된다.

가부장제 이론의 관점은 노동계급 내 파편화를 더욱 부추기고, 여성 차별을 인류 역사의 변치 않는 특징으로 본다. 그러면 변화의 가능성도 없어지게 된다. 여성 차별을 ‘특권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것이다.

특권 이론은 새로운 것이 아님에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여겨진다. 특권 이론의 기본 출발점은 누군가가 예컨대 백인이거나 남성이라면 사회의 “지배적” 부문에 속함으로써 특권을 누린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사회에서 노동계급 백인 남성은 백인이고 남성이므로 특권을 누린다. 이런 식으로 보면 체계적 불평등과 차별을 개인 관계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환원시키고 사회 구조의 문제를 놓치게 된다.

또, 차별로 특권을 누린다는 그 사람들을 문제의 일부로만 여길 뿐, 그 사람들과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백인이나 남성이나

이성애자는 차별에 맞서는 투쟁에 동참하기 어렵다고 보며 중시하지 않는다.

특권 이론의 논리에 따르면, 백인 남성들은 모두 이해관계가 같으므로 여성은 그들과 따로 조직돼야 하고, 마찬가지로 흑인 여성도 따로 조직돼야 한다. 그러나 노동계급을 각종 차별 형태에 따라 끝없이 잘게 쪼개는 것은 노동계급의 집단지 힘을 약화시킬 뿐이다.

최대한 강하게

우리의 힘을 최대한 키운 상태에서 지배자들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차별에 반대하는 것은 우리 편을 더 강하게 만든다. 사회주의자는 어디서든 성차별에 반대한다. 어떤 차별이든 지배자들이 우리를 분열시키는 데 이용되기 때문이다.

러시아 혁명이 레닌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사회주의자들은) 민중의 호민관이 돼 각종 전횡과 차별이 민중의 어느 계급이나 계층을 겨냥하든, 또 그런 전횡과 차별이 어디서 벌어지든 그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러나 사회를 나누는 결정적 기준은 계급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소득이나 직업에 따라 계급이 나뉜다고 보지 않는다. 노동력을 파는 사람과 노동이 만든 잉여가치로 이윤을 취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로 계급을 나눈다.

이처럼 이윤을 위해 착취당한다는 점 때문에 노동자들은 체제의 핵심이 된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할 때,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은 체제를 개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체제 자체에도 도전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 투쟁은 사라지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계급의식 수준이 높은 낮은 행동에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투쟁에 나설 때 노동자들은 자신의 힘을 느낄 수 있고, 사장들에 맞서 모두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보게 된다. 노동자들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잠재력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노동계급이 여성을 대신해서 투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성 대중이 노동계급으로서 자신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바로 그 힘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해방을 쟁취할 수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2343호

번역 김동환



자본주의에서의 성 상품화는 여성 몸의 이미지를 왜곡시켜 평범한 여성들이 도달하기 어려운 외모를 이상화하고 여성들에게 강요한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과 계급 문제

이 기사는 지난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의 학술대회가 매우 성황리에 개최됐다는 소식을 전한다. (노동자 연대)는 이 대회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한국의 진보·좌파·여성 운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 뒤늦긴 했지만 이 소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행사에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한국의 주류 페미니즘이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계급 문제, 반자본주의 투쟁과의 연대 등을 강조했다. 이 행사는 올해 9월 베를린에서 또 열릴 예정이다.

필자인 실라 맥그리거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당원으로 1970년대 이래로 노동자 투쟁과 여성 차별 문제에 관한 글을 써 왔다.

‘새로운 페미니즘’이 부상하면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과 여성차별에 대한 유물론적 접근법도 다시 관심 받기 시작했다.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세헤르자드 모잠 편집) 같은 책들이 출간되고, 리즈 보겔과 미셸 바렛 같은 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예전 책이 재출간되는 것을 봐도 그런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학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에 대해 논의해 왔다. 가령 <히스토리컬 머티리얼리즘> 대회에서 그랬다. 2015년 3월 3일간 열린 학술대회 ‘마르크스주의-페미니즘의 궤적’은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행사였다. 대부분 여성이고 남성도 일부 포함된 약 5백 명의 참가자들이 베를린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의 대강당에 모여 ‘마르크스주의의 페미니즘화’ 또는 페미니즘에 마르크스주의를 접목시킬 방안을 두고 토론했다. 3백 명 이상의 자리가 없어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베를린 비 판이론 연구소(InkriT)]의 프리가 하우크의 주도로 독일, 미국, 캐나다,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학술대회를 조직했다.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학자들이 많이 참가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마사 히메네스, 리즈 보겔, 헤스터 에이젠슈타인, 영국의 신시아 코번, 헬렌 콜리, 독일의 카티아 키핑, [캐나다] 토론토의 세헤르자드 모잠이 주요 연사로 참석했고 이론가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파이크 기조 강의를 했다.

이 원로급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의 뚜렷한 목적은 여성 차별 논의에서 계급 문제를 부활시키는 것이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신자유주의 공격으로 제국주의·전쟁·인종차별·인종·민영화 문제를 놓고 여성들의 견해가 갈리면서, 정제성 정치의 시기가 저물기 시작했다. 이를 포착한 원로급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힘을 세 세대에게 주장할 수 있었다고 봤다.

그 판단은 적중했다. 참가자의 다수가 유럽과 북아메리카 전역에서 온 젊은 여성이었고, 인도, 터키, 이란, 라틴아메리카에서 온 여성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학술대회는 주로 이론적이었지만 방대한 주제를 다뤘다. 그러나 일부 워크숍은 의료와 교육 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투쟁, 보육 서비스 관련 노동자와 이용자들의 투쟁을 건설하는 문제 등을 다뤘다.

이 때문에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됐다. 이를테면, 과거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러시아 혁명의 패배 이후 가족 제도가 지속된 것을 근거로, 마르크스주의가 여성 차별에 맞서 싸우는 도구로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렸었다.

다수가 유럽과 북아메리카 전역에서 온 젊은 여성이었고, 인도, 터키, 이란, 라틴아메리카에서 온 여성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학술대회는 주로 이론적이었지만 방대한 주제를 다뤘다. 그러나 일부 워크숍은 의료와 교육 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투쟁, 보육 서비스 관련 노동자와 이용자들의 투쟁을 건설하는 문제 등을 다뤘다.

세계 여성의 날 기념을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는 최근 독일에서 일어난 인종적인 시위들이 어떻게 조작됐는지가 토론됐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2014년에는 5천 명, 2015년에는 8천 명이 여성차별 반대, 국제주의, 임금, 일자리, 교육 문제를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프리드리히 베타(독일 좌파당 당원)는 시위가 잘 조직된 이유를 설명했다. 인내심을 갖고 토론을 통해 공통의 과제를 찾는 데서 시작해, 최종으로는 쿠르트록 여성들과 노동조합 활동가를 포함한 80개의 다양한 단체를 ‘투쟁하는 여성들의 연합’이라는 광범한 연대체로 모아 낸 것이 주효했다고 한다.

베타는 페미니스트 운동이 좌파 정치 프로젝트, 진정한 사회적 항의 운동과 연결돼야 하고, 개혁적인 혁명적이든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나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 경향이 진정한 사회주의 전통과 다시 연결해 맺을 가능성을 봤다. 독일의 클라라 체트킨과 러시아의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같은 사회주의자들은 여성 노동자를 사회주의적 변혁을 위한 투쟁의 일부로서 조직하고, 이를 통해 여성 문제를 전체 노동계급 해방을 위한 투쟁의 핵심 요소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 행사에서는 이러한 사회주의 전통에 대한 언급이 너무 적었다.

이 때문에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됐다. 이를테면, 과거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러시아 혁명의 패배 이후 가족 제도가 지속된 것을 근거로, 마르크스주의가 여성 차별에 맞서 싸우는 도구로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렸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5년 5월호

번역 최병현

활동가의 한 세대가 중국, 쿠바, 스탈린 이후 러시아 같은 국가를 사회주의로 여기며 여성차별은 자본주의의 사회와는 별개로 가부장제에 기초를 두는 것이므로 여성은 남성과 별도로 싸워야 한다고 봤다.

한편, 몇몇 참가자들은 이 행사에서 전쟁과 제국주의를 핵심 주제로 다루지 않은 것을 제대로 비판했다.

그리스 시리자의 집권을 주제로 한 워크숍은 공공서비스 노동자이자 이용자인 노동계급 여성이 긴축 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 맞서 싸울 방법을 논의할 좋은 기회였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전체 행사는 단결을 호소하고 2016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끝났다. 마사 히메네스는 2016년 행사 때까지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자고 호소했다. 간략히 말해 그 과제는 상호교차성*처럼 차별을 묘사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차별 일체와 노동계급 남녀 모두의 삶을 형성하는 데서 계급이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로 나아가자는 것이었다. 이 작업이 잘 진척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여성을 위한 변화는 모두 필연적으로 남성을 위한, 남성에 의한 변화를 수반한다. 따라서 “페미니스트 투쟁”은 계급 투쟁의 문제와 연결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는 노동계급 여성이 노동계급 남성과 마찬가지로 해방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다고 봤다. 성정하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 의미가 있으려면, 변화를 위한 현실의 투쟁과 사회운동에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5년 5월호

번역 최병현

상호교차성
인종차별, 계급, 여성차별 등 여러 차별들이 서로 교차해 나타난다고 보는 접근법.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대체로 이 접근법이 차별의 구체적 경험을 묘사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계급을 단지 여러 차별 중 하나로 취급함으로써 차별의 근원을 이해하는 데는 약점이 있다고 본다.

강남역 살인 피의자 검찰 기소

빈곤과 소외를 낳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야 한다

이현주

검찰이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범죄를 조현병에 의한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인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여성혐오 범죄’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것이다. 여성이 무고하게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도 정당하다.

살인 피의자가 범행 당시 여성에 대한 큰 반감이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듯하다. 그러나 이런 반감은 피해망상의 영향을 크게 받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라고 보는 주장은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가 피의자의 행동에 핵심적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무시당해서, 담배공초가 신발에 맞아서 기분 나쁘다고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죽인 일’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여성을 멸시하는 남자들이 많아도,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경찰·검찰의 범죄 분석·진단에 동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찰·검찰은 무차별 살인 범죄를 순전히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만 본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런 무차별 범죄에는 개인의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 그 근처에는 자본주의 하의 소외가 있다고 본다.

피의자가 처했던 조건과 상태를 살펴 보면, 가난한 배경에 변변한 직업도 가진 적이 없고 가족·친구 관계도 단절돼 있었으므로, 깊은 패배감과 두려움에 차 있었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자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이다. 이런 두려움은 피해망상과 같은 심리적 불안정으로 발전할 수 있고, 특정한 계기나 요인이 결합되면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폭발할 수 있다.(소외와 관련해서는 본지 177호 김승주, ‘마르크스주의와 소외’를 보시오.)

즉, 피의자는 자본주의 소외의 영향으로 느낀 무력감을 자신보다 만만해 보이는 이에게 분노를 폭발시킴으로써 만회하려는 흔한 유형이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은 이 사건을 ‘여성혐오’ 심리로 분석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점을 건드린다. 자본주의가 낳는 빈곤과 소외가 인간성을 파괴하고 이따금 끔찍한 살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말이다. 따라서 빈곤과 소외를 낳는 체제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혐오 범죄는 더 심각하게 다뤄져야

혐오 범죄는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적대감이 주된 동기로 작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범행 당시 여성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다 해서 곧 ‘여성혐오’ 범죄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증오 범죄를 연구해 온 연구자들도 ‘여성혐오’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한다면 서도 “범죄학적, 형사법적으로 봤을 때 강남역 사건이 증오범죄가 아닐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

강남역 살인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번 사건이 이런 혐오범죄 규정을 충족시킨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여성혐오’를 매우 느슨하게 규정하고서 ‘여

성혐오’ 범죄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혐오’를 느슨하게 규정하면 혐오 범죄의 뚜렷한 특성은 사라진다. 여성 차별 의식에 근거한 잘못된 행위는 무엇이든 혐오 범죄가 될 수 있다. 혐오 개념을 느슨하게 사용하면서 혐오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주장하면, 국가가 형벌권을 강화하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진정한 혐오 범죄는 훨씬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 성소수자들이나 무슬림들에 대한 공격에 비춰 보면, 혐오 범죄는 특정 집단을 사회악이라고 보며 공동체에서 추방하고자 하는 매우 목적의식적인 공격 행위다.

범죄를 집단의 속성으로 돌리는 접근법의 위험성

여성 차별에 맞서기 위해 반드시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라고 규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는 견해는 자본주의 체제라는 물질적 구조가 아니라 ‘여성을 혐오·억압하는 남성 집단’의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본다.

그런데 개인이 저지른 범죄를 집단의 속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치환하는 것은 위험하다. 자본주의 지배자들의 거짓 선동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올랜도 대학살 직후 오바마는 무슬림이 모두 동성애 혐오 집단인 양 편견을 부추겼다. 올해 초 독일 쾰른에서 끔찍한 성범죄 사건이 벌어졌을 때 독일 우익들은 이주민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범죄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해서 정신질환자 전체가 범죄자로 취급받아선 안 된다는 논리는 남성 집단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

선정주의적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회의 다른 측면도 봐야 한다. 남성의 다수는 흉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성차별 관념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살인과 폭력으로 희생된 여성들에게 연민을 보낸다는 것이다.

여성의 죽음을 조롱하는 ‘일베’ 따위가 다수 남성의 의식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강남역 살인은 너무 당연한 일이어서 뉴스거리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노동운동 속에서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들은 계급적 정체성을 키워 왔다. 5월 28일 열린 전교조 주최 전국교사대회.

분노의 배경: 모순된 현실

최근 몇 년간 차별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가 커진 것은 여성에 대한 전에 없는 차별과 혐오가 생겨났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오늘날 여성들은 전의 어느 때보다 많이 대학에 진학하고 노동자가 된다. 오늘날 젊은 여성들은 남자 형제를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지 않는다.

바로 이를 배경으로 전의 어느 때보다 젊은 여성들의 자의식과 기대감이 커졌다. 결혼 연령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는 점은 이를 보여 주는 한

지표다. 여성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은 경제적 요인이 크지만 자의식의 성장과도 관련 있다. 여성도 성적 주체(대상이 아니라)라는 인식도 갈수록 커져 왔다.

그러나 사회에 나온 여성들은 대부분 이내 큰 벽에 부딪힌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본주의 노동인구의 일부가 됐음에도 여전히 차별받는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주된 책임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고 여겨진다. 지속되는 경제 위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더욱 여성들의 부담을 덜려 하

지 않고, 오히려 더한층의 희생을 강요하려 한다.

즉, 사회 진출로 여성의 상대적 지위가 상승하고 자의식이 전의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차별 구조와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존재하는 모순된 현실이 젊은 여성들의 분노를 키운 배경이다. 기존에 없던 차별과 혐오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다. 여성 차별은 여전히 뿌리깊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심각하게 후퇴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 여성 노동자들의 힘은 전에 없이 커졌다.

해방의 전략: 남성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겨냥해야 한다

차별받는 현실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는 매우 커졌지만, 노동계급의 투쟁 수준은 충분히 높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노동계급의 단결을 통한 체제 변혁 사상보다는 피착취자의 일부도 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단편적 관점이 더 쉽게 호응을 얻는 듯하다. 남성을 여성의 적으로 간주하고, 여성 차별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즉 남성들)에게 도덕주의적 잣대를 들이대는 정서가 적지 않다.

이는 차별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의 한 표현이겠지만, 잘못된 표현이고, 여성 차별에 맞선 투쟁의 동맹을 설득할 가능성을 기각해 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남성들은 여성 차별에 맞선 투쟁의 중요한 일부였다. 가령 2000년대 이후 벌어진 대단했던 여성 노동자 투쟁들 — 이랜드 노동자, 대학 청소노동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등 — 은 다수 남성 노동자들의 지

지를 얻었다. 여성이 다수인 전교조나 보건·의료 관련 노조 소속 노동자들의 투쟁도 여성과 남성 모두의 지지를 얻었다. 노동운동 속에서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들은 계급적 정체성을 키워 왔다.

이런 투쟁들은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사회적 힘을 가진 존재임을 자각하게 도와 준다. 그리고 남성 노동자들이 여성들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돌아보게 하는 효과를 낸다. 이런 효과는 전반적 계급투쟁 수준이 낮을 때에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 투쟁이 승리하거나 계급투쟁 수준이 높아졌을 때는 더욱 두드러진다. 오랫동안 받아들여 온 차별 관념은 투쟁 속에서 바뀔 수 있다.

여성 차별을 없애려면 여성 차별을 유지함으로써 득을 보는 자본주의에 맞서야 한다. 여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무기는 계급투쟁이다.

계급과 계급투쟁을 무시하면 개혁

을 성취하는 데서도 뚜렷한 한계가 있다. 당장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나 민영화,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같은 시장 지향 정책들을 막으려면 남녀 노동계급의 힘을 동원해야 한다. ‘노동개혁’과 민영화,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평범한 여성 다수의 삶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성 적대가 사회의 근본 분열이라고 보는 ‘양성 분리적 여성주의’는 남성과 여성의 단결이 필요하고 가능한 영역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무시하면, 이런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낳는 여러 요인들 — 여성 차별, 가족제도, 성별 고정관념, 소외 — 도 체제의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여성 차별의 증상을 완화하고 나아가 완전한 해방을 이루려면 여성 차별 반대 운동은 자본주의에 맞선 남녀 노동계급의 투쟁을 중심에 뒀야 한다.

지중해 익사 난민 2년 반 새 1만 명 돌파

유럽연합은 난민들에게 닫혀 있는 요새

차승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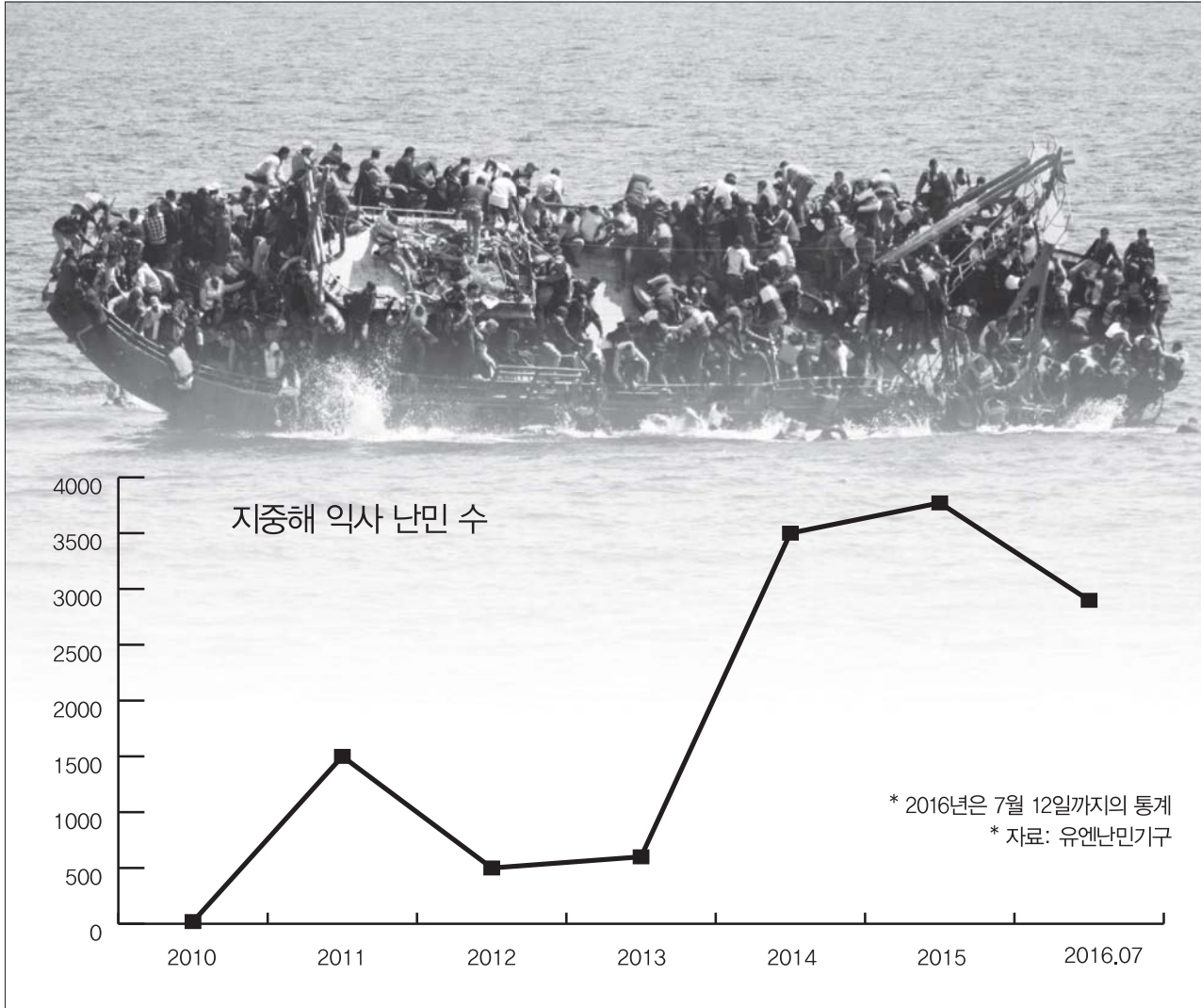
유엔난민기구 통계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지중해에서 익사한 난민은 1만 1백69명이다. 지중해에서는 2주에 한 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는 셈이다. 이제 절반 지났을 뿐인데 올해 난민 사망자가 2015년 전체 사망자에 육박한다. 올해 지중해 익사 난민은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정말로 인권 보장을 원칙으로 삼는 기구라면 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 비극에 대처한다며 유럽연합이 내놓은 처방은 난민을 더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지난해 터키와 난민 송환 협정을 맺어 유럽에 들어온 난민을 대거 터키로 되돌려 보낸 데 이어, 이제는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 국가들과도 비슷한 협정을 맺으려 한다. 그러나 터키와 리비아 등은 난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터키 내 시리아 난민 3백50만 명 중 1백만 명만이 난민 캠프에 수용돼 있고, 나머지 2백50만 명은 집도 일자리도 없이 궁핍하게 산다.(정선영 등, '시리아인 압둘 와함 인터뷰: "모든 국가들이 시리아에서 손을 떼야 한다"', <노동자 연대> 165호) 리비아 상황은 더 끔찍하다. 2015년 국제앰네스티는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 리비아에 머물고 있는 아프리카 난민들이 고문·강간·유괴·살해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했다. 여성들의 처지는 특히 더 비참하다.

또, 유럽연합은 군함, 헬리콥터, 무인 정찰기를 투입하는 해상 순찰을 강화해 난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려 한다. 이 때문에 난민들은 전보다 더 위험한 경로를 선택한다. 국경 통제 강화는 난민 사망을 줄이기는커녕 늘리는 조치인 것이다.

유럽연합은 밀입국 알선업자 소탕



유럽연합이 이주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난민에게 안전한 이동 수단만 제공해도 이런 비극은 사라질 것이다.

운운하며 국경 통제 강화를 정당화한다. 영국 신임 총리 테러사 메이의 말이 그 논리를 잘 보여 준다. “범죄집단을 색출해서, 보트에 몸을 싣고 유럽으로 향하는 사람들과 그 범죄집단의 연계를 끊어야 한다. ... 북아프리카든 어디든 고향으로 돌려 보내면, 그들이 이런 항해를 감행할 유인이 사라질 것이다.”

유럽으로의 밀입국 수단을 제공하는 알선업자들이 난민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난민들이 누구든 자유롭게 유럽으로 갈 수 있다면 알선업자들이 설 자리는 사라질 것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조차 이렇게 지적했다. “억압, 폭력, 경제적 곤궁

을 피할 통상적 경로가 막히면, 사람들은 필사적이 돼서 불법 경로라도 이용할 것이다. ... 국경 봉쇄 시스템에 헛되이 들이는 자원을 합법적 이민 경로를 극대화하는 데로 돌릴 수 있다.”

‘경제’ 난민과 ‘진정한’ 난민을 가려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이는 유럽에서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논리다. 그러나 세계 난민의 다수는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자들이다.(1위 시리아, 2위 아프가니스탄, 3위 소말리아. 이 세 나라 출신 난민이 전 세계 난민의 54퍼센트를 차지한다.)

이 지역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등 서방이 앞장서 퍼뜨린 신자유주의 정책과 외채라는 굴레, 그리고 미국 등 서

방이 벌인 제국주의적 전쟁 탓에 황폐해진 곳들이다. 즉, 유럽연합은 난민 위기 발생의 주된 책임자 중 하나인 것이다.

주된 책임자

난민들은 이런 극단적 처지에서 탈출해 나온 것이므로, 모든 난민은 인정 받아야 한다. 현실에서는 ‘순수한’ 정치 난민과 경제 난민을 구분하기도 힘들다. 게다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중간에 죽을 확률도 높은 피난길에 오르는 것은 그리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다. 이처럼 난민을 가르는 것은 그 일부를 파렴치한으로 모는 것으로 이어진다.

난민을 가려 받아야 한다는 논리의 바탕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는 주

장이 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88위에 불과한 레바논에서는 전체 인구의 26퍼센트가 난민인 반면,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국이 즐비한 유럽연합에서 난민은 전체 인구의 0.2퍼센트밖에 안 된다. 유엔인권최고대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조차 유럽연합이 난민 1백만 명을 넉넉히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말이다.(물론 유럽연합은 후세인이 말한 것보다 난민을 훨씬 더 많이 받을 능력이 있다.) 이런 알량한 태도가 유럽연합식 ‘인도주의’의 실체이다.

유럽연합의 국경 통제 강화와 난민 비난은 흔히 무슬림에 대한 인종차별을 수반한다. 난민 중에 무슬림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0년대 초 ‘테러와의 전쟁’으로 심해진 유럽 내 무슬림 혐오는 난민 위기를 배경으로 더 극심해지고 있다. 유럽 각국 주류 정치인들이 무슬림혐오를 부추기는 것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이민자와 난민들에게 돌리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수작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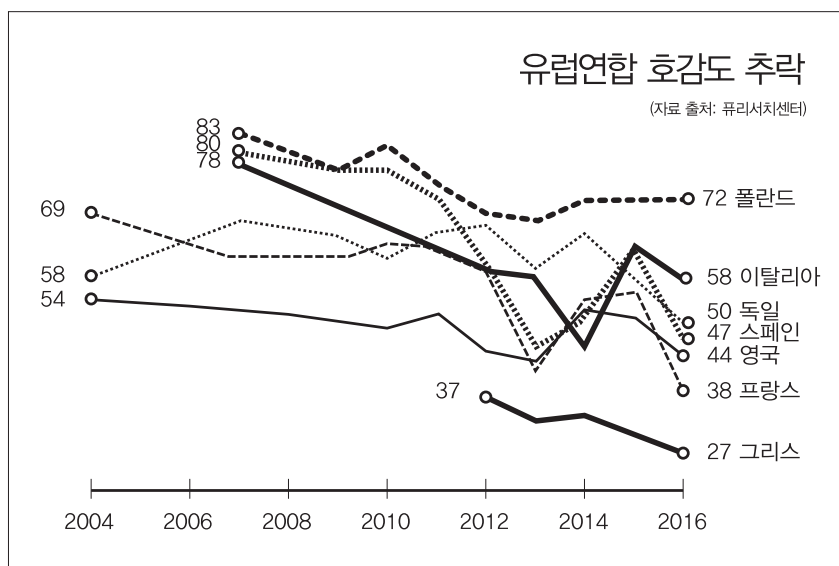
이렇게 지배자들이 부추기는 무슬림혐오적 인종차별은 긴축을 밀어붙이는 주류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함께 유럽 곳곳에서 파시즘과 우익 포퓰리즘이 성장하는 토양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파시즘과 우익 포퓰리즘에 맞서는 것이 급선무라며 유럽연합을 애써 미화하고 지키려 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유럽연합 같은 자본주의 기구를 비판하며 위기에 대한 좌파적 해법을 제시하고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고무하는 것이야말로 유럽 좌파들의 과제일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유럽에서 긴축에 맞선 투쟁이 성장하고, 이것을 배경으로 그리스 스페인·영국 등지에서 좌파 개혁주의가 성장하고, 유럽 곳곳에서 난민에 연대를 보내는 시위가 수만 명 규모로 일어난 것을 볼 때 이런 전망은 근거 없는 게 아니다.

유럽연합 호감도가 급락하다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둔 6월 초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유럽연합을 호의적으로 보는 유럽인은 51퍼센트였다. 이는 4~5월 유럽연합 회원국 10곳에서 1만 4백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국내 여러 언론도 보도했듯이,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10년 새 유럽연합 호감도가 뚝 떨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영국에서는 2004년 54퍼센트에 44퍼센트로, 프랑스에서는 2004년 69퍼센트에서 38퍼센트로, 스페인에서는 2007년 80퍼센트에서 47퍼센트로, 이탈리아에서는 2007년 78퍼센트에서 58퍼센트로 급락했다. 경제 위기와 혹독한 긴축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에서 유럽연합 호감도는 27퍼센트



에 안 됐다.

유럽연합의 호감도가 급락한 배경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감이 있다. 유럽연합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

율이 50퍼센트를 넘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이탈리아에서는 68퍼센트, 프랑스에서는 66퍼센트, 스페인에서는 65퍼센트가 유럽연합의 경제정책

에 반대했다. 특히, 그리스에서는 무려 92퍼센트가 유럽연합의 경제정책에 반대했다.

태생부터 유럽 자본의 이익을 위한 기구였던 유럽연합은 미국·동아시아와의 경쟁 속에서 회원국들의 노동계급에게 내핍을 요구하며 성장을 꺾어왔다. 최근에는 그리스에 혹독한 긴축을 강요하고 프랑스 정부의 노동법 개혁을 지지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2005년 유럽연합 헌법 부결 등 계속해서 유럽 대중의 이의제기를 받아 왔다. 특히 지난해 유럽연합 등이 내놓은 긴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그리스인들이 압도적으로 반대(OXI) 투표를 한 것을 보면 유럽 곳곳에서는 그리스인들에게 연대를 보내는 시위가 열렸다. 그 시위들에서는 “그리스가 나아갈 길을 보여 주고

있다”는 구호가 심심찮게 들렸다.

유럽연합이 비민주적이라는 점도 호감도 하락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리고 유럽연합 호감도 하락은 브렉시트 결과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물론 유럽 곳곳에서 파시즘과 우익 포퓰리즘이 성장하는 것을 보건대, 유럽연합 호감도 하락에는 우파적·민족주의적 선동이 작용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중요한 것은 유럽연합에 대한 좌파적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좌파가 유럽연합의 반노동자적 본질을 폭로하며 그에 맞서는 투쟁(특히 노동계급 투쟁)을 고무하고 조직할 때, 유럽연합에 대한 반감이 파시즘과 우익 포퓰리즘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좌파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로봇과 인공지능 논쟁

사회주의 유토피아인가,
자본주의 디스토피아인가?

[편집자]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에서 인간을 이긴 뒤 국내외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오해와 환상이 부쩍 늘었다. 심지어 인공지능이 결합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모두 차지할 것이라거나, 이 때문에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주류 정치인의 입에서도 흘러나올 정도다. 정말 그런 시대가 우리의 코앞에까지 성큼 다가왔을까?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마이클 로버츠**(아래 사진)가 로봇과 인공지능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제시한다.

다음 세대에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고 경제를 주도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날까?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들의 일자리와 삶의 질은 어떻게 바뀔까? 로봇과 인공지능의 시대는 우리 시대에 사회주의 유토피아, 다시 말해 인간이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넘쳐나는 풍요 속에서 발전해 나가는 조화로운 사회일까? 아니면 경제 위기는 갈수록 극심해지고 계급 투쟁이 더욱 격해지는 자본주의 디스토피아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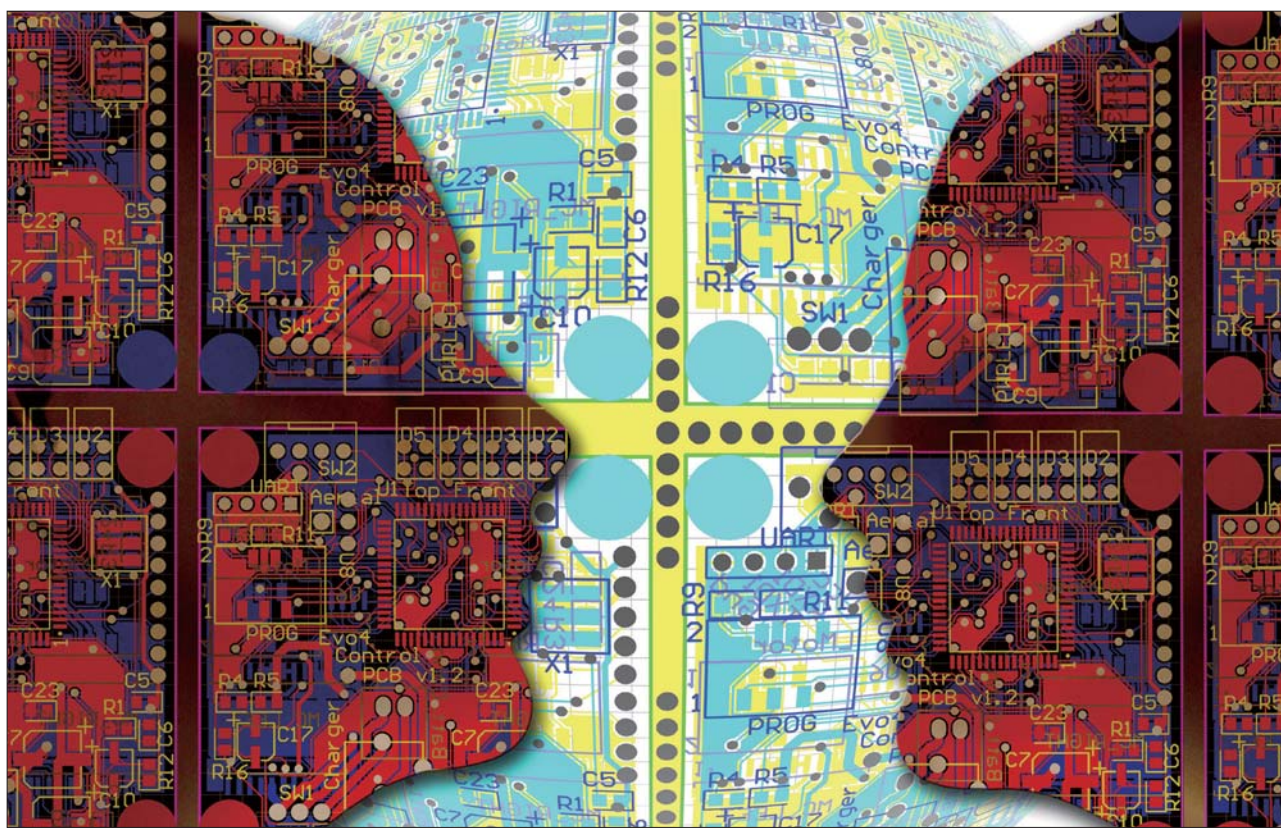
로봇 활용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십 년간 선진 자본주의 경제의 산업에서 로봇의 활용도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일본과 한국은 제조업에서 노동자 1만 명 당 로봇 3백 대가 도입된 나라들로, 로봇 활용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그 다음은 독일로 노동자 1만 명 당 로봇 2백50대 정도가 활용되고 있다. 미국은 1만 명 당 로봇 수가 일본이나 한국의 절반이 안 된다. 지난 십 년간 로봇 도입률은 브라질에서 40퍼센트, 중국에서 210퍼센트, 독일에서 11퍼센트, 한국에서 57퍼센트, 미국에서 41퍼센트 정도 증가했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기계들이 단지 미리 프로그램 된 내용대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과 경험에 맞게 프로그램과 작업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인공지능은 로봇이 학습을 수행하고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앤드류 맥아피는 지능이 높은 인공지능 기계들이 보급돼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되는 'SF(공상과학) 경제'가 곧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MIT 동료인 에릭 브린올프슨과 《제2의 기계 시대》를 공저한 저명한 교수다. 그에 따르면 SF 경제의 도래는 우리 사회에 크나큰 경제적·사회적 해택을 줄 것이지만 “노동의 가치가 절하되는” 경제 체제가 등장할 수도 있다고 덧붙인다.

기술적인

옥스퍼드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칼 베네딕트 프레이와 마이클 오즈본은 기술 진보가 7백2개의 직업군에 끼치게 될 영향을 예측했다. 그들이 조사한 직업군에는 발 전문의부터 여행 가이드, 동물조련사, 개인금융 상담사, 청소부까지 광범한 일자리가 포함됐는데, 이들이 내놓은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다.

“우리의 추계에 따르면, 미국 내 일자리 중 47퍼센트가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다. 더군다나, 임금이 낮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컴퓨터로 일자리가 대체될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지난 수십 년간은 기술진보가 진행됨에 따라 중위소득군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패턴이 보였다. 그러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 이에 반해, 우리의 모델에 따르면 가까운 미래에 컴퓨터에 의해 대체될 일자리는 주로 저숙련 저임금 직업군에 몰려 있다. 이에 반해 고숙련 고임금 일자리들은 컴퓨터 자본재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상당 부분 유지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최근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경제성과 연구소의 게오르크 그레츠와 가이 마이클스는 유럽·호주·한국·미국 등 17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14대 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주되게는 제조업 관련 산업들이었지만, 농업과 공공부문도 포함한 연구였다), 조사 결과 산업로봇은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 그리고 임금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또한 산업로봇의 도입으로 총노동시간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고용 감소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관찰됐다. 고용 감소 효과는 주로 저임금 일자리에서, 그리고 일부 반(半)숙련 일자리에서 관찰됐다.

요컨대, 앞선 연구 결과와 달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역(노동시간)을 줄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로봇이 도입됨으로써 미숙련 노동자들과 일부 반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사라졌다. 요컨대 일감은 늘었지만 노동시간은 줄지 않았고 실업은 증가했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에서 노동시간은 1970년대 이래 계속 증가해 왔다.

모순

자본주의적 축적의 근본 원리는 이윤을 늘리고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기계를 도입해 개별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경쟁 자본가들보다 비용을 줄이고 싶어 한다. 이런 방식 덕분에 자본주의는 사회의 생산력 발전에서 엄청나게 혁명적인 구실을 했다.

그러나 모순도 있다.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기술을 도입하면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감원된다. 신기술이 노동을 절약하는 효과를 낳는 것이다. 물론, 생산성 향상으로 총산출이 증가하면 새로운 부문이 생겨나 일자리를 보충한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자본 편향적” 또는 노동절약적 기술 진보가 이뤄져 투하된 자본의 비용에 비해 비교적 적은 가치가 창출된다. 노동만이 가치를 만들기 때문이다. 요컨대 생산성이 상승하지만 수익성은 저하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경향이 지속적으로 관찰되면 생산은 위기를 겪게 된다. 그리 되면 신기술 도입으로 생긴 경제적 이득은 사라진다. 심지어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현대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하에서는 수익성이 투자와 생산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이 극도로 발전한(공상과학 소설 같은) 미래가 실현된다면, 이런 분석은 어떤 함의를 지니게 될까? 로봇이 로봇을 생산할 뿐 아니라, 로봇이 원재료의 추출과 생산을 모두 담당할 뿐 아니라, 사적·공적 업무를 모두 로봇이 처리해 생산과정에서 인간의 노동이 전혀 필요하지 않게

되는 1백 퍼센트 자동화된 상황을 떠올려 보자. 마침내 인간(노동) 없이도 원료를 제품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인간의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마르크스의 학설이 논파되는 것 아닐까?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 하에서 가치가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에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존재한다. 사용가치란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뜻한다. 교환가치는 노동시간으로 측정된 가치로, 자본가에 의해 인간 노동으로부터 추출되며 시장 교환을 통해 실현된다. 자본주의에서는 둘 중 하나만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투자와 생산과정을 궁극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사용가치가 아니라 교환가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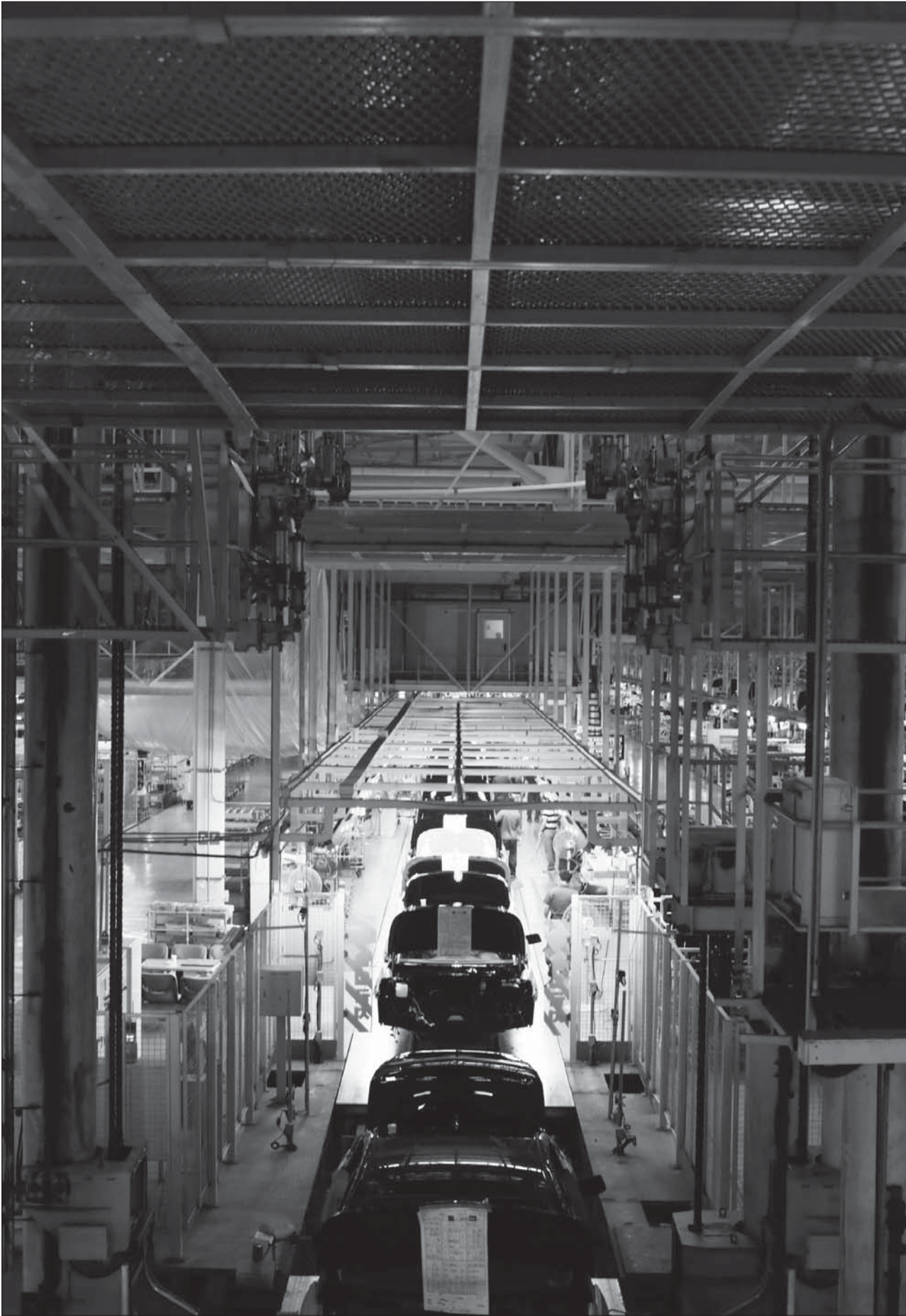
가치는 (그 정의상) 자본주의에 고유한 실체이다. 물론 산노동은 사물을 창조할 수 있고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사용가치) 그러나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에서 핵심은 가치이다. [더 자세한 설명은 ‘마르크스와 《자본론》②-자본주의 상품 가치의 비밀을 들춰내다’를 보시오 — 옮긴이] 자본 소유자들은 생산수단(역시 노동의 산물)을 통제하고 노동이 만드는 가치를 전유하기 위해서만 그 생산수단을 사용하려 한다. 자본은 스스로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없다.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이 일반화돼 완전 자동화가 이뤄진 가상적 상황을 분석해 보자. 이 경우 (사용가치의) 생산성은 무한대로 발산하되 이윤율(잉여가치/투하자본가치)은 0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닐 것이다. 차라리 고대 로마의 노예제 경제체제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본래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

로봇과 인공지능이 일반화돼 완전 자동화가 이뤄진 가상적 상황을 분석해 보자. 이 경우 (사용가치의) 생산성은 무한대로 발산하되 이윤율(잉여가치/투하자본가치)은 0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조종·감독·협력 없이는 로봇은 대개 무용지물이 된다.

고대 로마에서는 영세농민의 생산에 의존해 경제가 운용됐다. 수백 년에 걸쳐 이는 노예노동에 의존하는 체제로 전환됐다. 광업과 농업을 비롯한 온갖 일들을 노예가 전담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까닭은 로마에 노예가 매우 풍부하게 공급됐기 때문이다. 로마는 공화국 시기에서 제정 시기까지 여러 차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으로써 엄청난 양의 전리품들을 노획했는데 노예도 그 일부였다.

노예노동

노예 소유주들이 노예노동을 활용하는 편이 자유민을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혔다. (적어도 처음엔 그랬다.) 그래서 노예 소유주들은 소작농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냈다. 농민들을 쫓아내 빚을 독촉하고, 전횡터로 징발하고, 순전히 폭력으로 내쫓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과거에 자유민이었던 농민들은 제 발로 노예가 되거나 도시로 이주해야 했다. 도시로 이주하면 밥벌이를 위해 고되고 천한 노동을 감수하거나 구걸을 해야만 했다. 계급투쟁은 끊이질 않았다. 노예 소유 귀족과 노예들 사이에서, 귀족들과 도시의 원자화된 평민들 사이에서 투쟁이 계속됐다.

경제[생산]의 완전한 로봇화가 이뤄

진다면 생산수단의 소유자들(로봇 소유주들이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재화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로봇을 만드는 로봇을 다시 로봇이 만드는 식). 그리하여 이들은 희소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지고의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재화와 서비스를 무한대로 공급받으니 로봇 소유주들은 “이윤”이라는 것을 생산할 필요조차 없이 마음껏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치 고대 로마의 노예 소유 귀족들이 그랬듯이 말이다. 그들은 그저 노예노동의 생산물들을 소비했을 뿐 이윤을 획득하려 애쓰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상품을 판매하지도, 사업체를 운영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로봇 경제는 모든 이가 희소성 제약에서 해방된 풍요로운 사회일 수도 있지만,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극도로 큰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 사회일 수도 있다. 둘 중에 어떤 미래가 실현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사회적 “선택”에 달려 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본주의에서의 계급투쟁의 결과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로 돌아와 보자.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체할 날은 언제쯤일까?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인간에게 가장 손쉬운 일들이 기계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일에 속한다. 예컨

대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동전을 꺼내는 일 따위 말이다. 미국의 로봇 회사인 아이로봇이 내놓은 제품인 ‘룸바’는 완전 자동이다. 하지만 그 로봇이 완전 자동화될 수 있는 이유는 바닥 청소라는 극도로 간단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아이로봇이 출시한 팩봇은 그보다 더 비싼 모델이지만 사람이 원격조종을 해야만 작동할 수 있다. 팩봇의 기능은 폭탄 제거다.

미(美) 국방부의 연구 부서인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최근 캘리포니아 포모나에서 우승상금 2백만 달러가 걸린 로봇공학 경진 대회를 열었다. 한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인명 구조 작업을 수행한 로봇을 제작한 사람을 뽑는 대회였다. 로봇들에게는 작업 8개를 하는 데 1시간이 주어졌는데, 인간이라면 다해도 10분도 안 돼 해치울 수 있는 일들이었다. 하지만 로봇들은 대부분 그 작업을 수행하지 못했다.

자율적

당시 참가한 로봇 대부분은 다리가 두 개였지만, 다리가 네 개거나 바퀴가 달렸거나 바퀴와 다리가 모두 있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완전히 자동으로 움직이는 로봇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조종사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기계를 조종하며, 인간의 감독 없이는 그

(로봇을 포함한) 생산수단이 소수 자본가들의 손에 있는 한, 로봇 사회의 혜택은 오로지 소수의 지배계급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러한 기계들은 대개 무용지물이 돼 버린다. 로봇이 직접 계획을 세우고 완전한 자율성을 누리는 데 필요한 “인지” 영역에서는 로봇 기술이 대체로 답보 상태다. 이 때문에 많은 로봇 연구자들이 대안적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클라우드 로봇(공학)’, 혹은 ‘협력적 로봇’은 인간과 결합되는 로봇을 개발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로봇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말이다.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완전히 자율적인 인공지능과 로봇이 빠르게 도입되는 데에 자본주의 체제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신기술을 위한 재원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익성을 높일 만한 데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그는 “한때 사람들은 날아다니는 자동차와 텔레포트 장치 그리고 노동을 대신해 줄 로봇이 가까운 미래에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중에서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1960년대에 산업자본가들은 모두가 기대해 마지 않던 로봇 공장이 아니라 노동집약적 저기술 생산설비들을 체계적으로 재배치하는 데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 그리고 각국 정부들은 무기 개발 같은 방위산업 분야나 정보통신 및 보안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등 군사 연구에 재원을 집중했다.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다음과 같이 꼬집었다. “이 세상에 로봇 공장이 안 만들어진 이유는 로봇공학 관련 연구 재원의 95퍼센트가까이가 펜타곤미 국방부에 의해서 조달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펜타곤은 무인 종이 공장을 개발보다는 무인 정찰기 개발에 더 관심이 많다.”

생태계

예일대학교 경제학 교수 윌리엄 노드하우스는 미래에 인공지능과 로봇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추정했다. 그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여전히 요원하다. 소비자들이 아이폰에 열광하더라도 전자제품을 먹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적어도 오늘날의 기술 수준으로는 다양한 생산요소가 투입돼야 생산이 이뤄질 수 있다. 정보 자본만 아니라 노동, 에너지, 천연자원 등의 형태로 희소자원(“손으로 잡을 수 있는 재료”)이 투하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드하우스는 지난 10여 년의 추세로 추정하면 로봇 기술이 완전 자

동화를 이를 정도로 발전하는 데에 “한 세기 가량의 도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지구의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대중의 필요를 충족하고 가난을 끝내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기술 진보가 우리가 바라는 바다. 만약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기술이 우리를 그러한 사회에 좀 더 가깝게 데려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로봇이 인간의 고역을 최소한으로 줄여 주는 조화롭고 풍요로운 사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자본이다.

지난해 영국 고용기술위원회(UKCES)는 ‘직업의 미래’ 보고서를 발표해 장기 침체와 기술 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계속될 경우 일자리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관해 몇 가지 예측과 전망을 제시했다. 그런데 그 예측들은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좋은 기술이 없고 연줄도 변변찮고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미래는 처참할 정도로 열악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경제성장과 혁신이 전문직들에게는 고소득을 안겨주지만, 사회 성원 대다수는 고용 기회 감소와 제자리 임금에 시달리게 하는 상황이 현실화될지 모른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회는 격렬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로봇을 포함한) 생산수단이 소수 자본가들의 손에 있는 한, 로봇 사회의 혜택은 오로지 소수의 지배계급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더라도 자본가들은 거기에서 혜택을 볼 것이다. 그리하여 신기술의 이익 대부분이 가장 부유한 이들에게 돌아간다면, 디스토피아적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소유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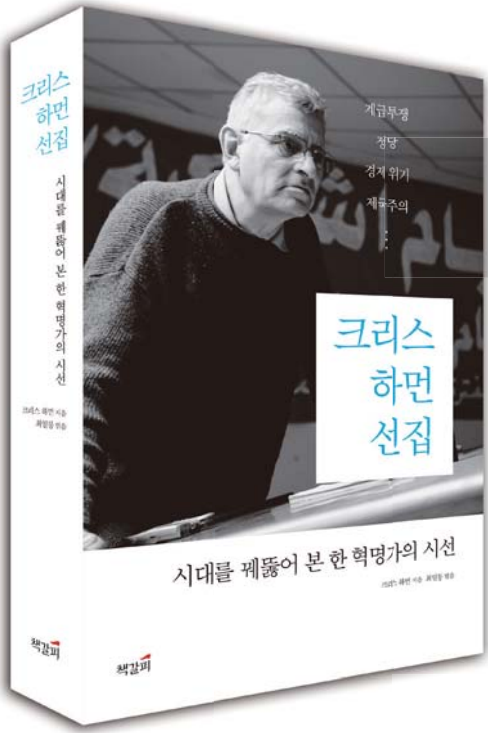
[글 서두에서 소개한 <제2의 기계시대>에 관한] 존 랭캐스터의 서평을 인용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굴러가도록 하려면 소유권 제도를 변혁하는 것 외에 남은 방도가 없다. 내가 이런 미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이다. 바로 자본주의 더하기 로봇으로 형성된 디스토피아적 미래 사회는 너무나도 끔찍할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정치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제시하는 대안 사회는 윌리엄 모리스가 꿈꾼 미래와 똑같다. 만인이 가지 있는 노동에 참여하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내가 그린 미래에는 로봇이 존재한다는 점 정도일 것이다. 이 책은 오늘날의 현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초(超)자본주의적 디스토피아와 사회주의적 이상향이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과 특히 사회주의라는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6년 7·8월호 / 번역 김종현

BOOKS



크리스 하먼 선집

시대를 꿰뚫어 본 한 혁명가의 시선

크리스 하먼 지음 | 최일봉 역음 | 책갈피 | 440쪽 | 18,000원

크리스 하먼은 옛 소련 국가자본주의 체제 붕괴 후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좌파의 사상적 혼돈에 굴하지 않고 곳곳이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을 지킨 대가이자 거장이고 달인이었다. 이 선집은 각 국면이나 논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 글을 모은 것으로 그의 역사적 통찰과 명확한 사상, 혁명적 사회주의자로서의 정신과 의지를 엿볼 수 있다.

※ 본지 웹사이트에 서평이 실려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와 여성해방

주디스 오어 지음 | 이장원 옮김 | 책갈피 | 440쪽 | 16,000원

인류의 절반인 여성은 왜 아직도 차별받을까? 왜 여성은 유리 천장을 뚫고 부와 권력을 누리기는커녕 저임금의 밑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여성운동이 거둔 성과가 공격받고 있을까? 여성해방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 책은 여성운동의 성과와 후퇴, 새로 등장한 문제와 모순을 검토하고 여성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전략을 내놓는다.

※ 서평이 15면에 실려 있습니다.



동성애 혐오의 원인

해방의 전망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원시사회에서 현대까지 성에 대한 인류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동성애자 억압의 근원이 자본주의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음을 밝힌다. 동성애자 해방운동의 실패와 성공 경험 등 풍부하고 생생한 사례를 통해 동성애자 해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한다.

※ 본지 웹사이트에 서평이 실려 있습니다.



마르크스21 15호

책갈피 | 232쪽 | 12,000원

브렉시트: 세계사적 전환

마르크스주의 계급 이론

데이비드 하비 비판

교육과 혁명 - 러시아 혁명의 위대한 사회주의 교육 실험 등

근간 소책자

현 시기 노동운동 진단과 쟁점들 -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의제를 중심으로 (가제)

노동자연대 펴냄 (구입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대표성 위기'론, 어떻게 볼 것인가 / 임금격차와 연대 / 민주노총 정치 방침과 대선, 그리고 노동자 정치세력화 / 재벌 개혁인가, 아래로부터의 반(反)재벌 투쟁인가? / 노동시간 단축 : 임금·노동조건 양보가 없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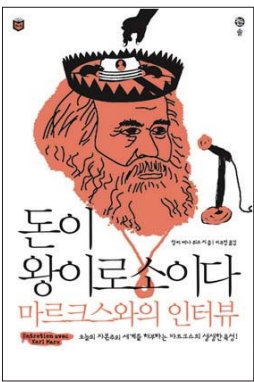
8월 22~23에 열리는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 20년을 맞아 노동운동 상황을 진단하고 민주노총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민주노총은 전략 투쟁 과제, 조직 강화·확대 전략,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한 정치 전략의 방향을 내놓았다.

이는 노동운동에 대한 중요한 진단과 분석, 과제를 아우르는 의제들이다. 이 소책자는 민주노총의 전략 과제와 쟁점을 살펴보고 좌파 활동가들의 과제를 제시한다.



진보평론 68호

수록 논문 중 '신자유주의로 조직 노동자 운동은 잠재력이 소진됐나? - 전지윤의 '신자유주의와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강동훈)을 읽어보시오.



돈이 왕이로소이다 - 마르크스와의 인터뷰

앙리 페나 루즈 지음 | 이주영 옮김 | 술 | 224쪽 | 13,000원

오늘의 자본주의 세계를 해부하는 마르크스의 생생한 육성! “쉽고 유쾌한 마르크스주의 입문서가 어디 없을까? 이 책은 마르크스와의 가상 인터뷰라는 형식을 띠고 있다. 마르크스의 모든 대답은 《자본론》이나 《독일 이데올로기》, 《공산당 선언》과 같은 그의 여러 저작들에서 인용한 것이다.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다 보면 정말 마르크스가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육성으로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까지 한다.”

※ 본지 웹사이트에 서평이 실려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만 볼 수 있는 기사들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국제

[이라크 전쟁에 관한 영국 칠콧 보고서] 정부의 전쟁 거짓말이 드러나다

동아시아 긴장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망(MD) 협력 역사

[세월호에 과적된 철근이 향한 곳] 제주 해군기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노동자 운동

[고용과 임금·조건을 지키기 위한] 19~22일 금속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라

[플랜트건설 노동자들] 조선3사, 현대자동차 노동자들과 함께 파업에 나선다

노골적인 민영화 방안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 철회하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은 임금과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투쟁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퇴출제 도입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서평

《크리스 하먼 선집》 거인이 남긴 발자국

《동성애 혐오의 원인》 해방의 전망 - 마르크스주의 분석》 성소수자 해방을 바라는 새 세대 활동가들의 필독서

《돈이 왕이로소이다 - 마르크스와의 인터뷰》 “오늘날의 자본주의 세계를 해부하는 마르크스의 생생한 육성!”

과학과 사이비 과학

[자본주의와 뇌과학] 인간의 정신을 조종하기?

[서평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동성애 혐오를 과학적인 양 포장한 책

분노하라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등] 귀화 요건 강화하는 국적법 개악 반대한다

불평등과 여성차별을 더 악화시킨 시간제 일자리

[공기업 채용에서도 여성차별] “양성 평등”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위선

[서울시의 구의역 사고 후속 대책 발표] 핵심 대책은 여전히 부족함

최저임금 1만 원 현실화를 위해서는 노동자 투쟁이 중요하다

실업과 가난에 내몰리는 청년들 -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안

이번 호 ‘누구의 말일까요?’도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wspaper.org



서평 | 《마르크스주의와 여성해방》 주디스 오어 지음, 이장원 옮김, 책갈피, 440쪽, 16,000원

여성해방을 이룰 수 있는 분석과 전략을 제시하다

정진희

오늘날 페미니즘이 국제적으로 부흥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서구에서는 성차별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성장해 왔고, 페미니즘 출판물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올해 그 열기가 더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영국에서 출판된 주디스 오어의 《마르크스주의와 여성해방》이 한국에 비교적 빠르게 번역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 책의 저자인 주디스 오어는 영국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정당인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중앙위원으로, 여성 차별의 현실을 분석하며 차별에 맞선 투쟁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 왔다. 올해 한국의 맑시즘에 연사로 초청된 오어는 맑시즘에서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며 한국의 청중과 토론할 것이다.

오어는 1980년대 이후 서구에서 유행한 ‘포스트페미니즘’ 담론, 즉 여성은 이미 평등을 성취했고 성차별은 과거의 잔재였다는 주장을 거부하며 시작한다. 오어는 여전히 만연한 여성 차별의 현실을 들어 ‘포스트페미니즘’ 주장이 대다수 여성들의 삶과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지 드러낸다.

오어는 생동감 있고 이해하기 쉬운 문체로 — 역자도 오어의 글을 한국어 독자가 읽기 쉽게 번역을 잘 했다 — 여성들이 겪는 실질적인 차별과 억압의 문제를 드러내지만, 단지 이런 고통을 묘사하는 데 머물지는 않는다. 이 책은 왜 여성이 여전히 불평등과 억압에 직면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밝히고, 차별에 맞서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 투쟁의 전략과 전망을 제시하는 데 주력한다.

이 책은 오늘날 페미니즘이 새롭게 부흥하는 배경을 살펴 보면서 최근의 논쟁에서 제기되는 이론적 쟁점들도 다룬다. 오어는 여성해방운동이 쇠퇴한 1970년대 이후 페미니즘의 이론적 발전을 살펴 보면서 ‘제3물결 페미니즘’에서 많이 논의되는 교차성 이론과 특권 이론을 비판적으로 다룬다.

여성 억압의 원인

오늘날 페미니즘에서는 여성 억압을 단지 억압받는 개인이나 사람들의 주관적 경험으로 묘사하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오어는 억압의 원인과 기능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사회를 전체적으로 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들 간의 억압적 관계는 억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억압의 원인은 아니다.

오어는 페미니즘에서 많이 제기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도전을 다루며 마르크스주의를 경제 또는 계급 환원론으로 보는 것이 왜 잘못된지 설명한다. 마르크스주의는 억압을 경제로 환원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마르크스주의는 억압이 작동하는 경제체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억압의 전반적 영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억



여성들은 이집트 혁명에서도 중요한 일부였다. 여성과 남성이 투쟁 속에서 단결할 때 의식의 변화가 광범하게 벌어질 수 있다.

압은 노동계급뿐 아니라 다른 계급의 여성들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억압이 사회의 계급관계와 무관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여성 억압은 인간 본성의 산물이 아니라 계급사회의 산물이다. 오어는 엥겔스가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펼친 이 주장을 최신 인류학과 고고학의 연구 성과를 풍부하게 이용해 다시 입증한다.

오어는 또한 자본주의에서 여성 억압이 지속되는 이유도 설명한다.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적 토대는 착취이고, 억압은 자본주의적 축적을 추동하는 핵심 과정의 일부는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억압은 자본주의적 착취 과정에 의해 만들어지고 억압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착취를 용이하게 만드는 구실을 한다.

계급사회에서 여성 억압을 형성하는 핵심 제도는 가족이고, 가족은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 여성의 역할은 언제나 그들의 계급적 위치에 따라 형성됐다. 오어는 자본주의에서 가족제도가 경제적·이데올로기적 구실을 통해서 자본축적이라는 목표에 기여한다는 점을 여러 사례

를 들어 보여 준다.

성적 자유를 둘러싼 논쟁

1970년대에 성 해방을 위한 투쟁은 여성해방운동의 핵심적 일부였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상품화한다. 1970년대 이후 성 상품화가 더욱 발전하면서 성 해방의 의미가 협소해지고 왜곡됐다. 성적 자유와 해방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페미니즘 내에서 커다란 이견이 있고 때때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난다.

오어는 오늘날 페미니즘에서 가장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섹슈얼리티 쟁점을 한 장을 할애해 다룬다. 포르노를 둘러싼 논쟁의 지형은 1970년대와는 상당히 달라졌는데, 오어는 포르노를 성 해방으로 간주하는 페미니즘 조류를 비판하는 한편, 국가의 힘을 빌어 포르노에 맞서려는 시도도 위험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성매매를 둘러싼 논쟁도 다룬다.

1970년대 이후 성 상품화가 더욱 발전하면서 여성 신체의 대상화가 더 많이 일어나자 성적 자유가 단지 남성의 자유만 증대시켰고 여성들에게는 해만 끼쳤다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도 나왔다. 여성을 단지 남성의 희생자로만 간주하는 이런 견해는 여성의 성적 욕망을 부정하는 시각을 강화하기 쉬운데, 오어는 성적 자유가 여성에게도 중요함을 밝히며 자본주의가 변혁될 때 성 해방의 가능성이 활짝 열릴 수 있음을 지적한다.

여성해방의 전략

여성 억압의 원인에 관한 이론적 분석은 여성해방을 위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실천적 문제와 연결된다. 오어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벌어진 ‘제1물결 여성운동’과 1960년대 말 부흥한 ‘제2물결 여성운동’ 시기에 벌어진 치열한 논쟁과 최근의 쟁점을 소개하며 여성해방을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제시한다.

오늘날 여성 차별 이론들은 대개 노동계급 투쟁의 중요성을 간과하는데, 오어는 여성해방에서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계급을 그쳐 여러 차별 중 하나로 여기는 시각이 많지만, 계급은 단지 또 하나의 차별이 아니다. 마르크스주의자는 계급을 단순히 경제적 불평등의 척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집단적 힘의 원천으로 이해한다.

페미니즘 이론에서는 여성이 노동계급의 핵심적 일부라는 점이 종종 간과되지만, 여성 노동자들은 오늘날 자본주의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전 세계 노동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도 40퍼센트이고, 성인 여성의 적어도 55퍼센트가 임금노동에 종사한다(세계은행 조사). 한국에서도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여성에게 이중의 부담을 안겨 주지만, 오어는 여성이 노동계급의 일부가 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의 무덤을 팔 수 있는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오어는 계급이 어떻게 집단적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는지, 자본주의 착취 과정에서 생겨나는 노동계급의 객관적 이해관계와 힘을 설명하고, 투쟁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단결하고 의식이 바뀔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 노동계급의 단결을 성취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혁명적 변화가 해방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오어는 1917년 러시아 혁명과 1936년 스페인 혁명을 통해 설명한다. 또한 자신이 일부 목격하기도 한 2011년 이집트 혁명의 경험을 예로 들어 혁명 과정에서 대중의 자신감 상승과 의식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 준다.

오어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여성들이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책은 여성들이 쟁취한 모든 성과가 지배계급이 결코 기꺼이 내 준 것이 아니라 투쟁의 산물임을 강조하며,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개선책을 위해 날마다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어는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 내에서 쟁취할 수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개혁주의 전략의 한계와 위험성도 경고한다. 1980년대에 많은 페미니스트가 노동당에 들어가서 노동당이 여성의 권리를 다루게 하려고 투쟁했지만, 노동당 지도부는 정치적 한계를 거듭 드러냈다. 노동당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하며 노동계급의 삶을 공격했다.

국가나 지배계급의 권력에 근본적으로 도전하지 않고 여성의 평등을 달성하려는 전략은 결국 평범한 남성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득을 얻으려는 방식으로 빠질 수 있다. 1980년대에 영국의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탄광, 항만, 인쇄업 등 여러 분야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은 것을 페미니즘의 성과로 묘사했다. 그 이유는 이런 직종에 주로 남성이 종사했기 때문이었다.

《마르크스주의와 여성해방》은 오늘날 광범한 여성 차별에 맞서 싸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분석과 역사적 교훈을 제공한다. 현대 여성들의 조건을 분석하고 여성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운동 내에서 제기된 논쟁점을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다룬 오어의 책은 한국의 여성운동과 페미니즘 사상을 분석하는 데도 유용하다. 이 책은 새롭게 급진화하는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의 여성 억압 이론과 투쟁 전략을 이해하고 차별에 맞선 투쟁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와 여성해방
주디스 오어, 책갈피, 440쪽, 16,000원



조선업 구조조정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박설

대우조선 분식회계와 구조조정 자금 지원 문제를 두고 속속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관련자들이 줄줄이 체포됐고 정부는 이를 빌미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들은 청와대가 주도한 서별관 회의(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가 문제라며 국정 조사와 청문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회계분식’은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내놓은 회계조작 사기행각을 말한다. 박근혜는 적어도 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는 당시에는 이 사실을 꼭꼭 숨겼다. 이듬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새누리당 인사들이 줄줄이 낙하산으로 내려가 경영하던 회사의 불법적 사기행각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 회의에 참석했거나 사실을 알고 있던 정부·금융권 인사들은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들이 한둘이 아닌 터라 대우조선 건을 눈 감는 게 어렵지도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경제개혁연구소는 재무제표상 “분식회계 징후”를 보이는 상장기업이 대우조선만이 아니라고 폭로했다. 특히 공사기간이 수년에 이르는 조선·건설업 등 수주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분식회계가 손쉽다. 경기가 잘 나갈 때는 이것이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고 부실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바로 여짜까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던 ‘우량’기업이 갑작스럽게 엄청난 적자를 가진 부실기업으로 추락했다.

대우조선은 2015년 5월 사장이 바뀌자마자 갑자기 적자 폭이 3조 원을 넘어섰다. 현대중공업도 2014년 9월 새 사장 취임 직전에 대규모 적자를 발표했다. 지난 2년간 그 규모는 4조 8천억 원이나 됐다. 자신의 실적 쌓기가 중요한 신입 사장들은 전 사장들이 만든 부실의 불통이 자신에게 뵈까 봐 이 문제를 털고 가고 싶었던 것이다.

구명 보트

박근혜 정부는 분식회계를 은폐한 채 지난해 대우조선에 4조 5천억 원을 지원하고, 올해 추가로 대규모 구조조



7월 15일 거제에서 열린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연대 집회.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첫 연대집회.

정 자금 확보에 나섰다. 이는 지배자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시장 논리’와는 사뭇 다르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에서 도태될 기업은 그렇게 되도록 놔두는 게 시장 논리다.

그러나 자본과 국가의 구조적 의존성에 대해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정부의 조처는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특히 오늘날 자본의 규모가 비대해지고 기업 간, 산업 간 연계가 그 물망처럼 얹히고설켜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부도 대자본의 파산을 손놓고 구경할 수는 없다. 한 기업이나 산업의 도산이 전체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2008년 세계경제 공황 이후로 세계의 주요 정부들이 부실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구명 보트’ 노릇을 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모든 기업주들의 부실과 비리를 감싸 주고 제 살길을 찾을 수 있도록 보듬어 안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원동력인 끊임없는 이윤 경쟁 때문에 기업주

들은 각자 자기 살길을 찾으려고 정관계 로비에 힘을 쏟는다. 이 속에서 경쟁력이 약한 (중소조선소 같은) 기업들은 위기가 닥쳐도 정부가 제공하는 ‘구명 보트’에 오르기가 쉽지 않다. 대자본이라 해도 일부는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버림을 받기도 한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돌연 그동안 묵혀 뒀던 대우조선 분식회계 카드를 꺼내들며 대대적인 검찰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정부는 총선 직후 조선·해양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방침을 천명하면서 공격을 시작했다. 대우조선에 대한 검찰 조사에 착수하고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밝혀 내겠다고 했다. 동시에 정부는 국내 5위의 재벌인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지난 7월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영자를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박근혜가 검찰이 갑작스럽게 정의의 사도가 돼서도 아니고, 재벌 총수 때리기에 흥미

가 생겨서도 아니다. 이 기업들은 모두 이명박의 “전리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명박과 그의 측근들이 막대한 돈을 받아 챙기고 뒤를 봐주던 곳들이다. 대우조선에는 이명박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주요 요직에 앉았고, 전 사장들은 이명박 부인 김윤옥을 비롯해 당시 정권 실세들에게 뇌물을 갚아 바친 의혹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롯데그룹도 이명박 정권 내내 밀월관계가 지속된 대표적 기업의 하나다.

갈등

박근혜가 이명박을 타깃 삼아 칼을 빼든 것은 노동계급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이자 총선 패배 이후 침체해진 정부·여당 내 계파 갈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최근 비박계의 대표주자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무성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고 “[대통령에게] 그동안 참고 참았다”고 발언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집권당의 내홍이 더 커지고 있을

을 잘 보여 준다.

이런 점들이 뜻하는 바는, 조선업 부실·부패에서 노동자들이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는 정부와 사용자들의 비리와 부패, 정치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깊이 새겨져 있다.

더구나 정부와 사용자들은 맹목적인 이윤 추구 속에서 위기의 씨앗을 키워 왔다. 한국의 조선업은 40여 년 전부터 정부의 강력한 지원 속에서 성장해 왔는데, 그 이점을 발판으로 세계 1위에 올랐지만 바로 그 이유로 비효율성이 극대화되면서 수익도 압박을 받았다. 조선업 위기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해양플랜트 사업에 대한 투자가 대표적 사례다. 2012년 정부는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펼치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고, 사용자들은 너도나도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달려들었다. 그러나 몇 해 지나지 않아 성장의 원천이었던 그 투자가 수익성을 크게 잠식시킨 요인으로 바뀌었다. 미친 듯한 수주 경쟁 속에 약간의 손실은 별것 아닌 양 치부됐고, 유가가 떨어져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일단 저가료라도 수주를 따내는 게 중요해졌다. 이런 과정에서 낭비와 비효율이 곳곳에 박혔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으로 돌려지고 있다. 정부·여당과 사용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목에 칼을 대기도 하지만,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데서는 한통속이다. 수주가 줄고 수익성이 하락하는 상황,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한국 경제 성장을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는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부와 사용자들은 단호하게 공격을 밀어붙일 태세다.

따라서 조선업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저지를 내걸고 파업에 나서는 것은 완전히 옳바르다. 박근혜 정부는 친이계를 겨냥해 대우조선 분식회계 문제를 터뜨렸지만, 서별관 회의에서 그 사실을 알고도 덮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곤혹스런 상황에 놓였다. 노동자들이 ‘위기에 책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단호하게 싸운다면 저들의 공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16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2016

7월 21일(목)~24일(일) / 장소: 고려대학교(서울) / 주최: 노동자연대

지금! 참가신청하세요

www.marxism.or.kr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rxism@marxism.or.kr



이 밖에도 국내 노동운동·사회운동 활동가, 진보·좌파 저술가들 수십 명이 맑시즘2016에서

노동자 운동, 경제 위기와 마르크스주의의 경제학, 여성·성소수자 차별과 해방을 위한 투쟁, 정의당과 진보·좌파 정치, 제국주의 등 70여 개 주제로 연설합니다.

웹사이트에서 행사 정보를 확인하고 참가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디스 오어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위원장 직무대행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

이호중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우다야 라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